

충청의 꿈과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

2021.
12. 8(수)
13:00~16:30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

주최  충청남도일보  충남연구원

후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의 꿈과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

개 회 식

1부
13:00-13:40

- 개 회 사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 환 영 사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 축 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충남의 미래를 묻다 세션

2부
13:50-16:20

- 좌 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 기조발언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신성장 엔진으로-
- 발 표 **방만기**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 토 론 **김강현** 카이스트 연구교수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변필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상** 우송대학교 교수

●● 목 차

기조발언: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1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 충청권 메가시티	
-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신성장 엔진으로 -	
발 표 1: 방만기(충남연구원)	21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발 표 2: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43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발 표 3: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67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신성장 엔진으로-

염인섭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충청의 꿈과 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 충청권 메가시티

—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신성장 엔진으로 —

2021. 12. 8.(목)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

발표: 염인섭 책임연구위원



[그 동안 우리는 ...>>>>>>>>]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

대한민국 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로 완성하겠습니다



1 국토의 중심부
경부축+강호축+동서축 초광역 연계
>> 대한민국 혁신성장 거점 구축



2 행정수도 완성
국가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기능분담
>> 성장잠재력 극대화



3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육성
>> 자립경제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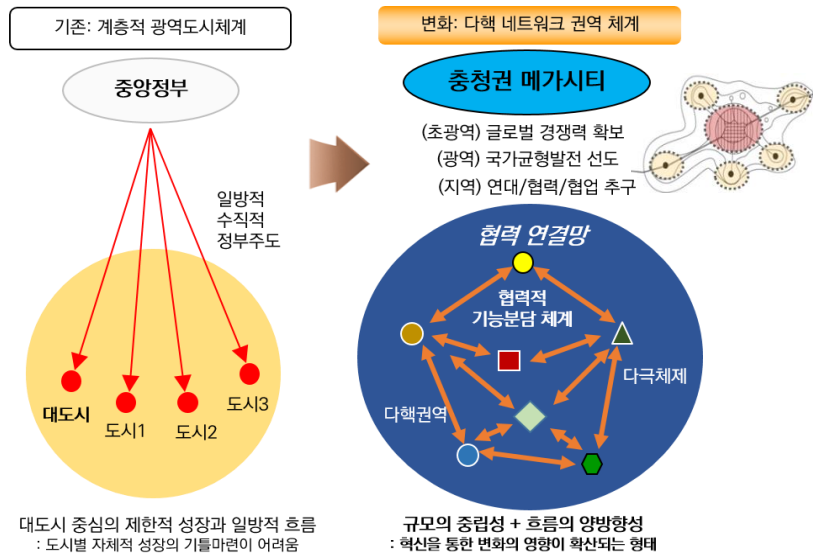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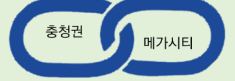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이란?

다핵 네트워크 권역 (메가시티 & 메가리전)

- ❖ **광역권** : 분업화 된 **협력 연결망**(생활권/경제권) 구조 형성
- ❖ **네트워크** :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체계 구축
- ❖ **거버넌스** :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 행정기능** 강화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생 고리



초국적, 글로벌경제, 혁신창출지역,
거대 도시권, 네트워크 도시권, 역동적 도시화,
토지이용혁명(도시+농촌), 다양한 요소들의 공간연계
연계협력, 상호보완, 기능연담, 지역간 근린관계 강화

Mega City-Region : Hall & Pain (2006)
메가시티에 지역의 개념을 포함, 거대도시권화 과정
(예) 영국의 8대 도시권(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Mega City : Castells (1996)
핵심도시 중심의 기능연계,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 도시권
1일 생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의 경제규모 등

Global City-Region : Scott (1999)
세계적인 대도시와 배후지역이 일체화, 초국적형태

Megaregion : Florida (2008)
세계적 경쟁체계 속에서 대량의 부와 혁신창출 지역
(예) 미국 10대 메가리전 (Northern California, Great Lakes, Northeast east 등)

Megalopolis : Jean Gottman (1961)
인구 100만명 이상 거대 도시들 간 상호 기능연담화로
형성되는 대도시권 (신지역주의+네트워크도시권)

New Megalopolis
한 도시권(지역)의 성장 ▶ 동반성장 or 사회적 비용 ↑
상호보완 또는 연계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충청도 지자체 단체장들 간 합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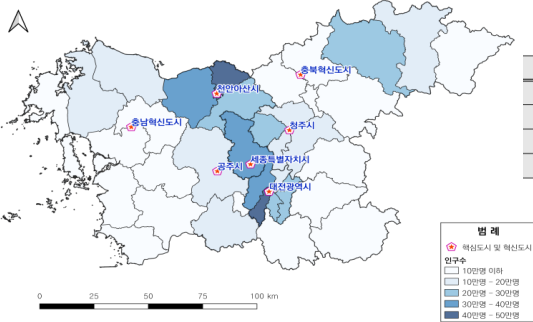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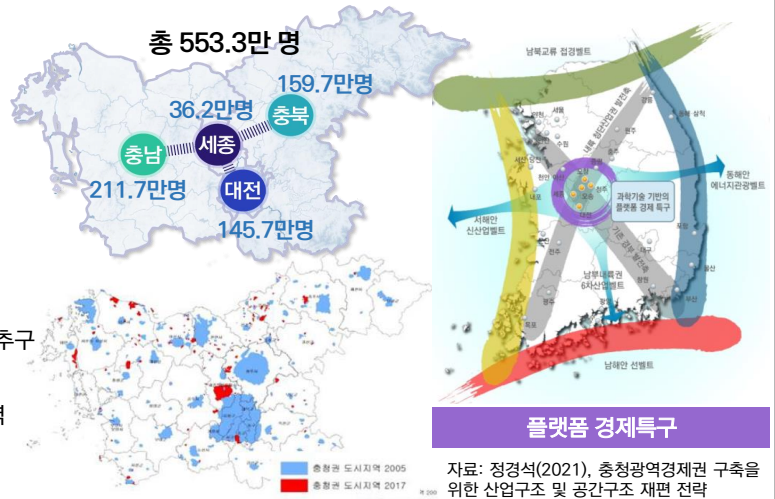
- ❖ 지역연한 중심 사업 설정/추진 후, **권역 간 협력을 강화**
- ❖ 광역거버넌스 유형 : **단계별 행정통합 모델**
- ❖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 : **아젠다 중심**
- 생활권과 경제권 형성을 위한 **매년 공동연구 수행**

제30회 충청권 행정협의회(‘21.3.15) / 메가시티 관련 시도지사 의견종합		요 약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연구과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포괄적' 협력과제 및 사업을 결정 (agenda setting, 현안 다루기)- 차후) '분야별' 세부적 연구 기능 *매년 현안 모색	<p>광역 철도망 & 국제공항/물류유통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 국제과학비즈니스, 4차 산업혁명 다핵거점 공간구조 & 네트워크형 도시연합▶ 중핵도시 육성 네트워크 거버넌스 & 분야별 관리청 운영▶ 광역통합</p>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가시티 연구용역 '매년' 수행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년 연구 과제 및 예산 미리 준비○ 단계별 추진 방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현안 과제 중심/ agenda setting- 중기) 광역철도 운영(광역철도청 등), 환경 등 분야별 협력- 장기) 행정통합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초, 메가시티 '방향' 담아 '발표'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말 광역철도 공청회 (6월 확정) 반영 필요 → 4.7.(서울시장 선거) 전 착수보고 개최○ 단계별 추진 방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광역철도망의 4차 계획 반영- 2단계 : 광역경제생활권(환경, 문화, 경제 등) 분야별 '관리청'- 3단계 : 행정통합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적극 협조 요청 *제30회 충청권 행정협의회(‘21.3.15. 공통안건 처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단계별 추진 방향 : 충북 안에 동의																
		<table><tr><th>분 야</th><th>9대 핵심 아젠다 (안)</th></tr><tr><td rowspan="3">경제 산업</td><td>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구축</td></tr><tr><td> 초광역 혁신플랫폼 구축</td></tr><tr><td> 글로벌 인적자원 기반 구축</td></tr><tr><td rowspan="2">광역 인프라</td><td>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td></tr><tr><td> 스마트 리전</td></tr><tr><td rowspan="2">문화 관광</td><td> 충청권 문화융성 기반 구축</td></tr><tr><td> 충청권 관광자원 연계활용</td></tr><tr><td rowspan="2">광역 행정</td><td> 광역생활서비스 권역 확대</td></tr><tr><td> 충청권 생태환경 통합관리</td></tr></table>	분 야	9대 핵심 아젠다 (안)	경제 산업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구축	초광역 혁신플랫폼 구축	글로벌 인적자원 기반 구축	광역 인프라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리전	문화 관광	충청권 문화융성 기반 구축	충청권 관광자원 연계활용	광역 행정	광역생활서비스 권역 확대	충청권 생태환경 통합관리
분 야	9대 핵심 아젠다 (안)																
경제 산업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구축																
	초광역 혁신플랫폼 구축																
	글로벌 인적자원 기반 구축																
광역 인프라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리전																
문화 관광	충청권 문화융성 기반 구축																
	충청권 관광자원 연계활용																
광역 행정	광역생활서비스 권역 확대																
	충청권 생태환경 통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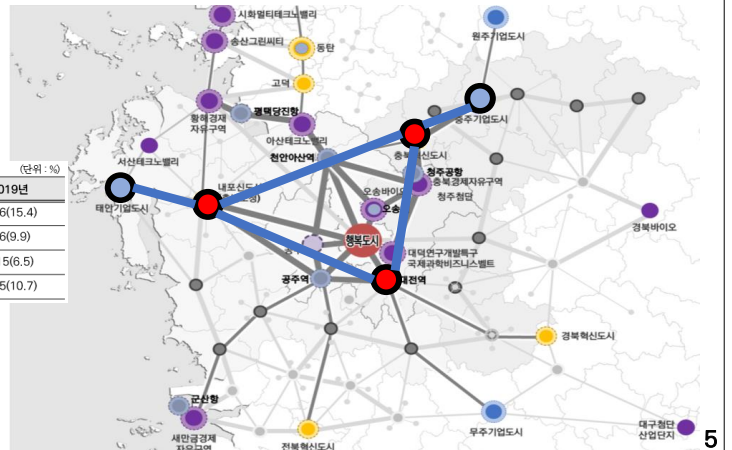
4

충청권 메가시티 SWOT 1

- ❖ **강점:** 인구대비 GRDP 높은 편(타광역권 대비)
 - 인구 553.3만명(10.7%), GRDP(12.5%)
 - 인적자원 경쟁력과 기술인력 풍부
- ❖ **약점:** 수도권 대응 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함
 - 수도권과 동남권(부울경)의 샌드위치가 될 우려
 - 권역차원 광역교통체계 미흡(국제공항, 동서 연결망)
 - 경제적 상호이익(1/N) 중심 메가시티 논의: 단계별 행정통합 추구
- ❖ **기회:** 다핵중심 네트워크 권역 도입에 유리
 - 혁신도시(3), 기업도시(2), 과학벨트(ISBB), 내륙첨단산업권역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결망 구축에 유리
- ❖ **위기:** 인구 유출현상과 지역 간 성장 불균형
 - 수도권(서울/경기)으로 **인재 유출(40~45%) 현상 심화**
 - 충청권 **청년인구(10.4%)**가 전체 인구(10.7%)대비 낮은 편임
cf) 수도권 청년인구비율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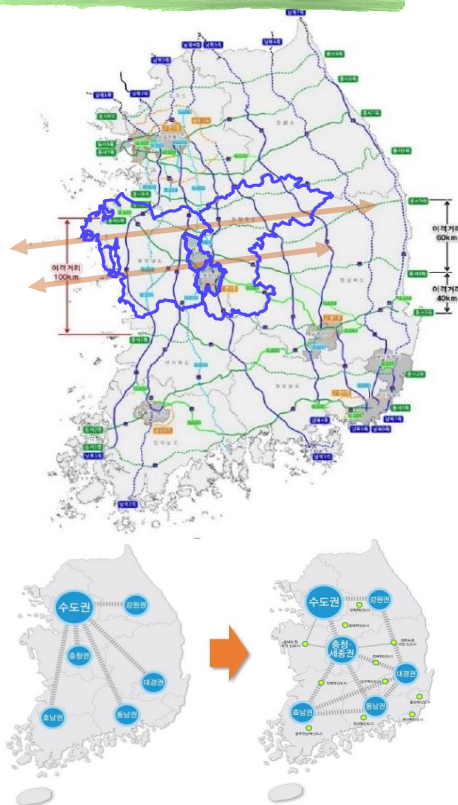
광역권	2019년
부울경	14.6(15.4)
대구경북	8.6(9.9)
광주전남	6.15(6.5)
충청권	12.5(10.7)



충청권 메가시티 SWO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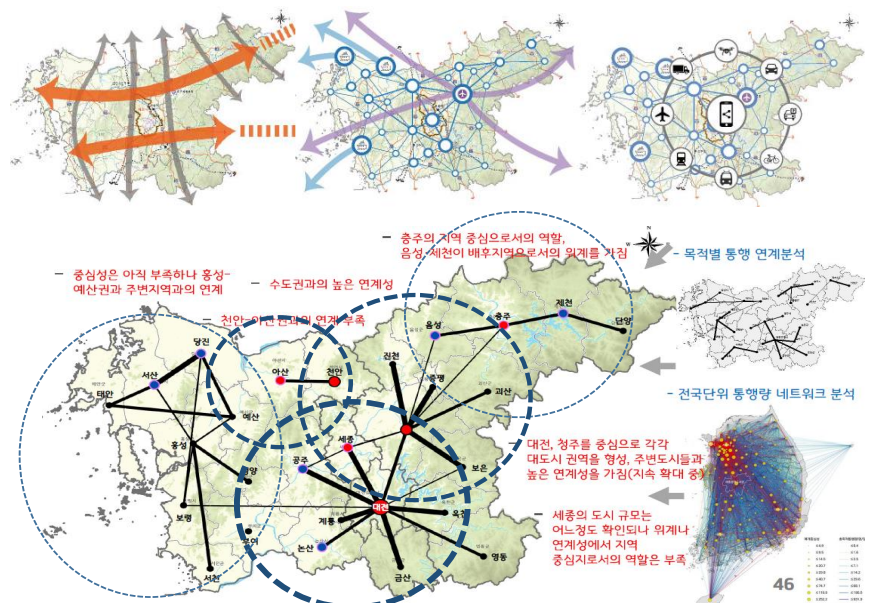
[충청권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

- ❖ 초 광역 균형발전의 비전 :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 ❖ 기능중심 광역(도시)권 형성 전략 : **메가시티 리전 (Megacity region)**
- ❖ 동서 발전 축 강화 방안 : 충청권 균형발전의 **광역 공간구조와 교통망**
- ❖ 신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등
- ❖ 충청권 관문 공항/항만 기능 강화 : 충청권의 **글로벌 중심성/연결성 강화**



일극종형(一極從型) 국토공간구조 → 다극형(多極型) 국토공간구조

자료: 오용준 외(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자료: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연구단(2021),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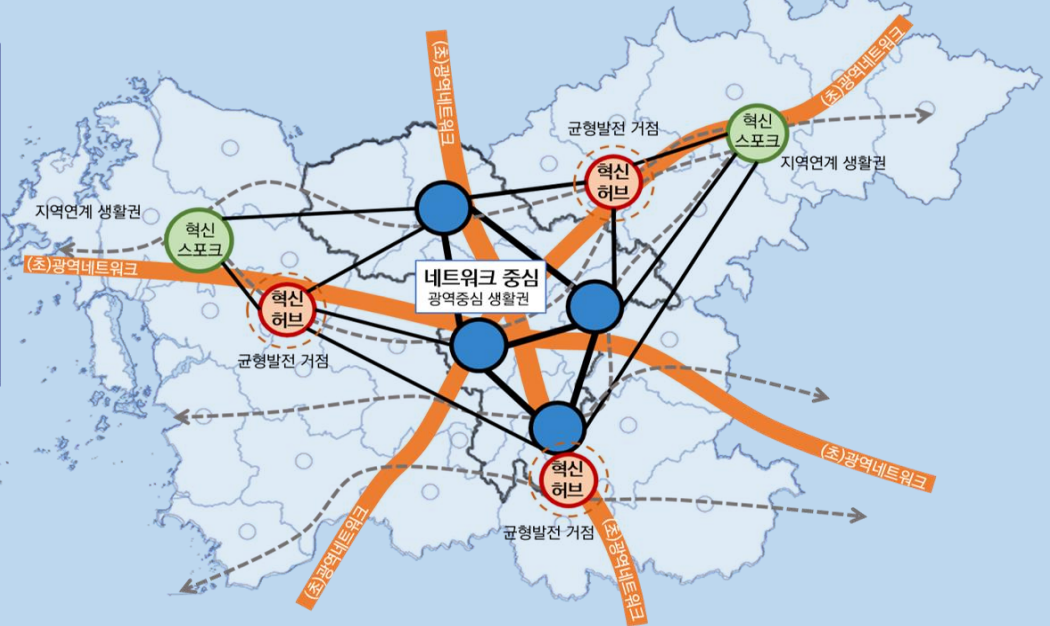
충청권 메가시티(MCR) 기본구상

글로벌 혁신주도 광역 경제권

스마트 광역연계 네트워크 생활권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연결하는 경제권 형성

지역균형발전 시대 서비스에 충실한 생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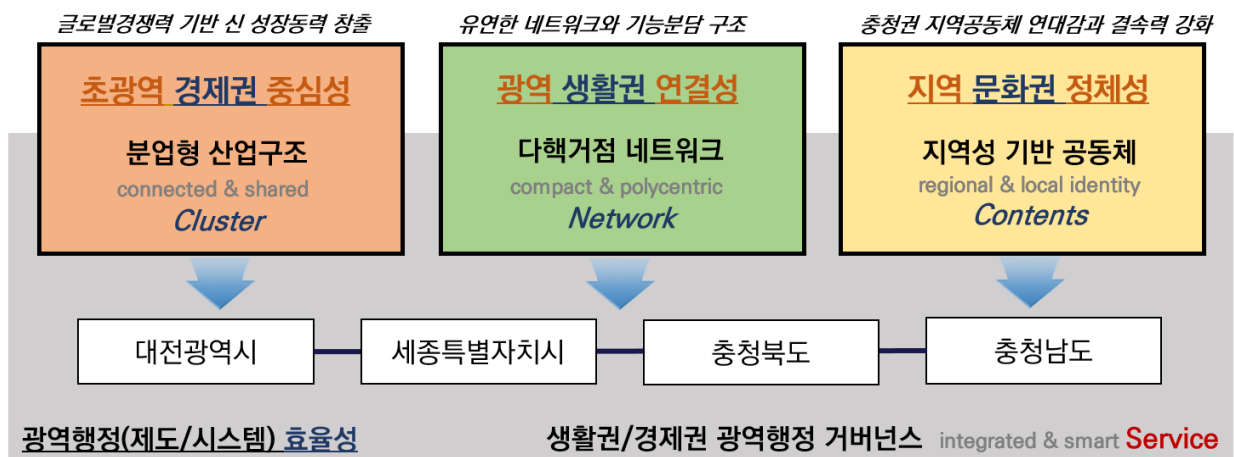


7

01. 충청권 메가시티(MCR) 기본방향

권역 차원(사업) 목적과 필요에 따른 3대 분야별 목표 설정

- ❖방향 ①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강화 ▶ 글로벌 경쟁력 창출 + 상호 경제적 번영에 기여 +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방향 ② 광역 생활권 연결성 강화 ▶ 기능중심 연결 체계 + 주민체감형 생활권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 구축
- ❖방향 ③ 지역 문화권 정체성 강화 ▶ 장소적 매력도 강화 + 사회문화적 동질감 확보 + 지역공동체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_NIS기반 RIS 모델”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협력모델

지역 간 상생발전과 기능분담은 사업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하는 것(손해와 이익도 함께)
“연대+협력 광역생활권”
“충청권 지역 정체성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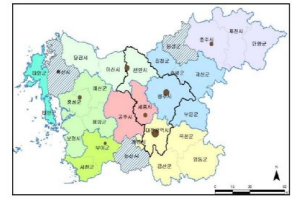
8

02.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설정 기준(안)

❖ 광역중심 생활권 [거점 도시]

- 대전/세종 생활권 (180.4만)
- 천안/아산 생활권 (95.9만)
- 청주 생활권 (83.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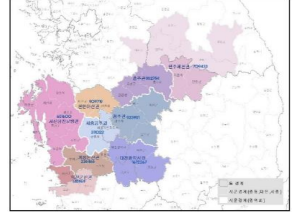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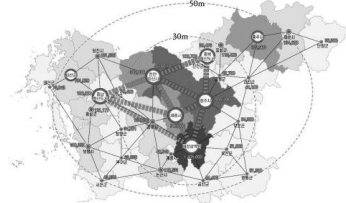
***인구: 300만명 이상**
네트워크 중심



❖ 균형발전 거점 [혁신 도시]

- 충남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18.1만)
- 충북 혁신도시 (진천/음성 2.5만)
- 대전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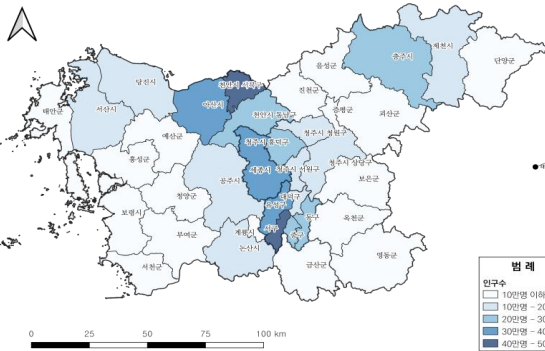
***미래형 성장거점**
혁신의 허브



❖ 지역연계 생활권 [연계 도시]

- 충주 생활권 (21.2만)/충주기업도시 등
- 서산 생활권 (17.4만)/태안기업도시 등

***인구: 20만명 내외**
혁신의 스포크



자료: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연구단(2021),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중간보고 자료); 일부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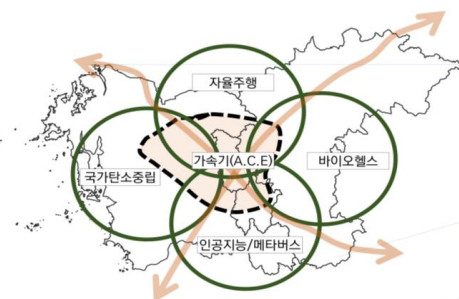
자료: 오용준 외(2021); 재인용

9

03. 충청권 메가시티(MCR) 비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

4차 산업혁명 혁신엔진



초광역 균형발전 허브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성장 新수도권

균형발전시대 초광역 차원 연대·협력
다핵다극시대 기능 분담 네트워크

- 1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2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3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4 초광역 인프라 구축

10

1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대덕연구단지 중심 과학기술 혁신체계 강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 기존산업 고도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료: 대전광역시(2021.10.)



2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바이오랩센트럴/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 자율주행 상용화/미래모빌리티 기반 조성

▶ 지역경제 혁신, 4차산업혁명 선도



자료: 대전광역시(2021.10.)

11

3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소산업 혁신클러스터 연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확대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탄소감축산업(친환경·재제조 부품) 육성

▶ 2050 탄소중립 시대적 소명 조기 이행



자료: 대전광역시(2021.10.)

4 초광역 인프라 구축

- 19개 광역도로망 및 7개 광역철도망 구축
- 글로벌 관문공항 및 항만 기능 강화

▶ 충청전역 50분, 거점도시 30분 '5030생활권' 완성



자료: 대전광역시(2021.10.)

12

04. 충청권 메가시티(MCR) 목표와 전략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 -

목표 01.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충청권 광역 신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메가시티

- 전략 1. 충청권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략 2.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R&D플랫폼 구축
- 전략 3. 혁신자원 연계 경제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목표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충청권 전체를 유연하고
강력하게 연결하는
메가시티

- 전략 1.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 전략 2.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전략 3. 충청권 스마트리전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목표 03.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충청민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강화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메가시티

- 전략 1.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실행력 강화
- 전략 2. 충청권 문화관광 국제화 및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 전략 3.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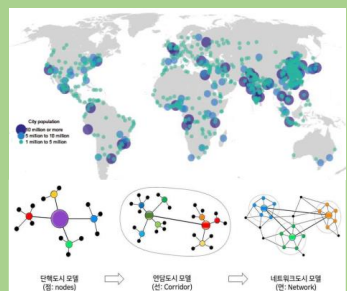
05. 메가시티(MCR) 추진체계

기본 구조

(생활권) 다핵 공간구조 구축 : 서비스 중심 광역권 연결
(경제권) 분업형 산업구조 : 클러스터 중심성 강화



Who	사업별 추진주체 (협력범위와 정도)
When	사업별 추진시기 (우선순위와 중요도)
What	유형별 추진사업 (연계효과/중복성)
Where	권역차원 사업추진 (네트워크 효과)
Why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목적/필요성 재검토)
How to	행· 재정 지원체계 (광역 사무행정)



자료: 진중현(2020),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 충청남도 세미나 자료집

14

충청권 메가시티 (MCR)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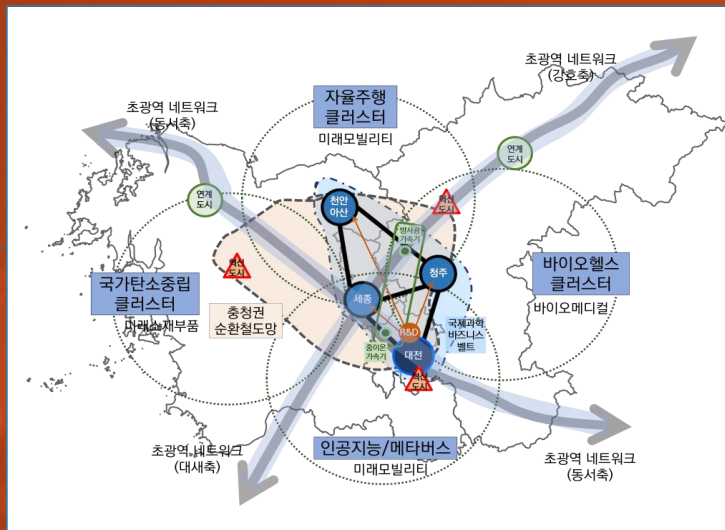
“9대 전략, 30개 사업”



전략 E1	충청권 연결의 경제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p>사업E1-1.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① 충청권 바이오밸리 센터빌 구축, ②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③ 바이오물류클러스터 산업 개발</p> <p>사업E1-2.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① 5G기반 자율주행 실증, ② 드론-UAM연구기반 조성, ③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p> <p>사업E1-3.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클러스터 구축 ① 인공지능-메타버스 코어 융합 기술 연구 개발, ② 충청권 주력산업 적용-혁신형 산업 생태계 구축, ③ 광역권 연계형 충청권 디자인산업 육성</p>
전략 E2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R&D플랫폼 구축	<p>사업E2-1. 충청권 초광역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① 소재기업 Industry 4.0기술 도입, ② 실증소재기업 R&D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 ③ 스마트 제조 혁신생태계 구축</p> <p>사업E2-2. 미래 신소재개발 R&D플랫폼 구축 ① A.I.기반 소재데이터(가칭)센터 구축, ③ 3D프린팅 소재 개발, ④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육성</p> <p>사업E2-3. 가속기 연계 R&D플랫폼 구축 ① 라온 바이오 융합의학 실험, ② 가속기 연계 R&D 지원, 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활성화, ④ 가속기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초광역 공유대학 조성</p>
전략 E3	혁신자원 연계 경제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p>사업E3-1. 충청권 지방 투자 금융체계 강화 ① 충청 지방은행 설립, ② 충청권역 기술자유구역 신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조성, ③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조성</p> <p>사업E3-2. 충청권 혁신자원 연계 강화 ① 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 ②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조성</p> <p>사업E3-3. 글로벌 인적자원 선도혁신 역량 강화 ① 메가시티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및 산학연 혁신역량 고도화, ② 대학혁신 연구단지 및 개방형 연구실 구축, ③ 광역단위 노동시장의 선순환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p>
전략 I1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p>사업I1-1.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C-FEZ) 개발 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② 충북 경제자유구역 신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조성, ③ 충청 내륙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p> <p>사업I1-2.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기반 구축 ① 충청권 탄소중립 거점 구축, ②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 운영, ③ 충청권 탄소중립 기반시설 조성</p> <p>사업I1-3. 충청권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 ① 충청권 철도망 연계 주요 철도역사 활용 거점형 복합용도개발 추진, ② 충청권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주변 창업단지 조성</p>
전략 I2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p>사업I2-1.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 완성</p> <p>사업I2-2. 충청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 구축</p> <p>사업I2-3.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p>
전략 I3	충청권 스마트리전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p>사업I3-1. 충청권 스마트 생활S.O.C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① 충청권 광역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충청권 광역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③ 수자원(공급·수·생물·농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④ 충청권 먹거리뉴딜 정책연계 푸드네트워크 구축</p> <p>사업I3-2. 충청권 스마트 자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① 충청권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②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 ③ 충청권 대기관리(미세먼지) 플랫폼 구축사업</p> <p>사업I3-3. 충청권 초광역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체계 구축 ① 친환경 수소 특화형 UAM R&D플랫폼 구축, ② 스마트리전 연계 그린 UAM 전문인력 양성, ③ 중부권 도심형 항공교통(UAM) 특화단지 조성</p>
전략 S1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실행력 강화	<p>사업S1-1. 충청권 스토리메이킹 활동을 위한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p> <p>사업S1-2. 충청권 문화관광 데이터 플랫폼 구축</p> <p>사업S1-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체 운영기능 확대 및 충청권 광역관광본부 신설</p> <p>사업S1-4. 중부권 광역문화재단 협의체 신설에 따른 금강 자원 활용</p>
전략 S2	충청권 문화관광 국제화 및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p>사업S2-1.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거점으로 R&D 특화 MICE산업 육성</p> <p>사업S2-2. 충청권 대표 관광 거점도시 육성</p> <p>사업S2-3.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개발</p> <p>사업S2-4. 충청권 광역시티투어 운영</p>
전략 S3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p>사업S3-1. 충청권 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시민 문화향유 증대</p> <p>사업S3-2.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p> <p>사업S3-3. 대청호 국립호수생태자원관 건립</p> <p>사업S3-4. 충청권 섬·호수 국제 비엔날레 추진</p>

15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충청권 광역 신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메가시티

집적; Cluster

산업경제 분야 전략 Economic

전략 E1

충청권 연결의 경제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 사업 E1-1.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사업 E1-2.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 E1-3.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구축

전략 E2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R&D플랫폼 구축

- 사업 E2-1. 충청권 초광역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 사업 E2-2. 미래 신소재개발 R&D플랫폼 구축
- 사업 E2-3. 가속기 연계 R&D플랫폼 구축

전략 E3

혁신자원 연계 경제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 사업 E3-1. 충청권 지방 투자 금융 체계 강화
- 사업 E3-2. 충청권 혁신자원의 연계 강화
- 사업 E3-3. 글로벌 인적자원 선도혁신 역량 강화

01.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미래신산업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전략 E1. 충청권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 [배경/목표]**
- 충청권의 유망산업군 여건과 현황을 고려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미래 모빌리티', '미래 소재부품개발',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 분야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 세계적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R&D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분야 GVC 구현

[사업구성]

E1-1.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E1-1-①. 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 E1-1-②.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E1-1-③. 바이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 ❖ (대전) 충청권 바이오헬스클러스터 구축
- ❖ (충북)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 ❖ (충북) 융복합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 ❖ (충남) 미래로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 ❖ (충남) 스마트 국가 해양바이오밸리 조성

E1-2. 친환경 미래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 E1-2-①. 5G 기반 자율주행 실증
- E1-2-②. 드론 UAM연구기반 조성
- E1-2-③.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

- ❖ (대전) 대전-세종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 ❖ (세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조성
- ❖ (충북) 중부권 도심형 UAM특화단지 조성
- ❖ (충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E1-3.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클러스터 구축

- E1-3-①. 인공지능-메타버스 코어 융합 기술 연구개발
- E1-3-②. 충청권 주력산업 적용·확산형 산업 생태계 구축
- E1-3-③. 광역권 연계형 충청권 디자인산업 육성

- ❖ (대전) 대덕특구 연구역량 기반 인공지능-메타버스 핵심기술 개발, 지역특화산업 지원
- ❖ (충북) 지역특화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연계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산업 육성
- ❖ (충남)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 환경 대응



[기대효과]

-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 및 동반 경제 성장 기대
-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으로 바이오 분야 세계 선도

01.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미래신산업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전략 E2.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R&D플랫폼 구축

- [배경/목표]**
-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소재부품의 산업적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 클러스터 육성 필요
 - 충청권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경박단소형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사업구성]

E2-1. 충청권 초광역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 E2-1-①. 소재기업 Industry 4.0 기술 도입
- E2-1-②. 실증소재기업 R&D 지원 및 시장 진출 지원
- E2-1-③. 스마트제조혁신생태계 구축

- ❖ (충남) 충남 첨단투자지구 지정
- ❖ (충남) 친환경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E2-2. 미래 신소재개발 R&D 플랫폼 구축

- E2-2-①. AI 기반 소재빅데이터(가칭)센터 구축
- E2-2-②. 3D 프린팅 소재 개발
- E2-2-③.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육성

- ❖ (충북) 경박단소형 미래 첨단신산업 생태계 조성
- 이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 희토류 및 희소금속 소재부품 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

E2-3. 가속기 연계 R&D 플랫폼 구축

- E2-3-①. 라온 바이오 융합학원 설립
- E2-3-②. 가속기 연계 R&D 지원
- E2-3-③. 국제파워비즈니스벨트 연계 활성화
- E2-3-④. 가속기 기술인력 초광역 공유대학 조성

- ❖ (충북) 방사광가속기 D.N.A(Data-Network-AI)센터 구축
- ❖ (충북)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시설 구축
- ❖ (충북) 방사광가속기 융합 캠퍼스 조성

[기대효과]

- 글로벌 수준의 특화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현
-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서 도약



01.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미래신산업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전략 E3. 혁신자원 연계 경제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 [배경/목표]**
- 충청권은 연구개발 측면이나 국가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 측면 모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주체들이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주체들간의 연계나 협력을 위한 시스템은 대부분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어 메가시티 생활경제권으로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이면에는 혁신주체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할 플랫폼이 필요하나 충청권은 혁신주체이외 경제기반이 되는 금융, 기술창업 및 투자 생태계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체계 변화를 충청권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충청권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선순환 금융시스템, 창업투자플랫폼, 광역단위 인적자원육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임

[사업구성]

E3-1. 충청권 지방 투자 금융 체계 강화

- E3-1-①. 충청 지방은행 설립
- E3-1-②. 충청권역 기술주회사 설립
- E3-1-③. 글로벌 창업투자진흥센터 설치

- ❖ (충남)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E3-2. 충청권 혁신자원 연계 강화

- E3-2-①. 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
- E3-2-②.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 ❖ (대전)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 (세종)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 ❖ (충북) 충북경제자유역을 포함한 초광역 충청권 공동경제자유구역(가칭) 지정 ; 충청권 경제자유구역청

E3-3. 글로벌 인적자원 선도 혁신역량 강화

- E3-3-①. 메가시티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및 선한연 혁신역량 고도화
- E3-3-②. 대학혁신 연구단지 및 개방형 연구실 구축
- E3-3-③. 광역단위 노동시장의 선순환 인적자원시스템 구축

- ❖ (세종) 충청권 국립대 통합 공동운영
- ❖ (세종) 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 ❖ (충북)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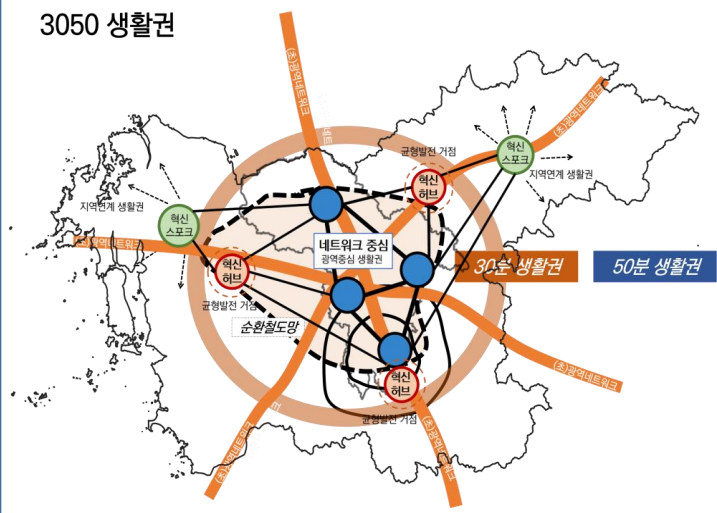
[기대효과]

- 지역기반 금융 및 창업투자플랫폼, 광역단위 인재양성을 통해 자금인력이 선순환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지원과 지역내 창업·투자 등 금융플랫폼으로서 역할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및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능동적 수용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인재양성

19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네트워크 조성

3050 생활권



충청권
전체를 유연하고
강력하게 연결하는
메가시티

연결; Network

광역 인프라 분야 전략 Infrastructure

전략 I1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 사업 I1-1.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C-FEZ) 개발
- 사업 I1-2. 충청권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사업 I1-3. 충청권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

전략 I2

충청권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사업 I2-1.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 완성
- 사업 I2-2. 충청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 구축
- 사업 I2-3.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전략 I3

충청권 스마트리전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 I3-1. 충청권 스마트 생활 S.O.C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사업 I3-2. 충청권 스마트 자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사업 I3-3. 충청권 초광역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체계 구축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전략 I1.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배경/목표]

-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권 중심성과 생활권 연결성 강화**를 위한 **초광역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기 위한 전략임
- 이는 **충청권의 주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을 연결**하되,
 - 첫째, 경제권 차원에서는 **충청권에 특화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산업클러스터 연계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임
 - 둘째, 생활권 차원에서는 **다핵/다극 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연결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임



[사업구성]

I1-1.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C-FEZ)개발

- I1-1-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I1-1-②. 충북 경제자유구역 신수도권 경제중심지로 조성
- I1-1-③. 충남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 ❖ (대전, 세종)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전세종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 ❖ (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 ❖ (충북) 방사광가속기 중심 과학도시 건설 :융합캠퍼스 조성,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I1-2.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기반 구축

- I1-2-①. 충청권 탄소중립 거점 구축
- I1-2-②.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충청권 푸른하늘포럼 운영
- I1-2-③. 충청권 탄소중립 기반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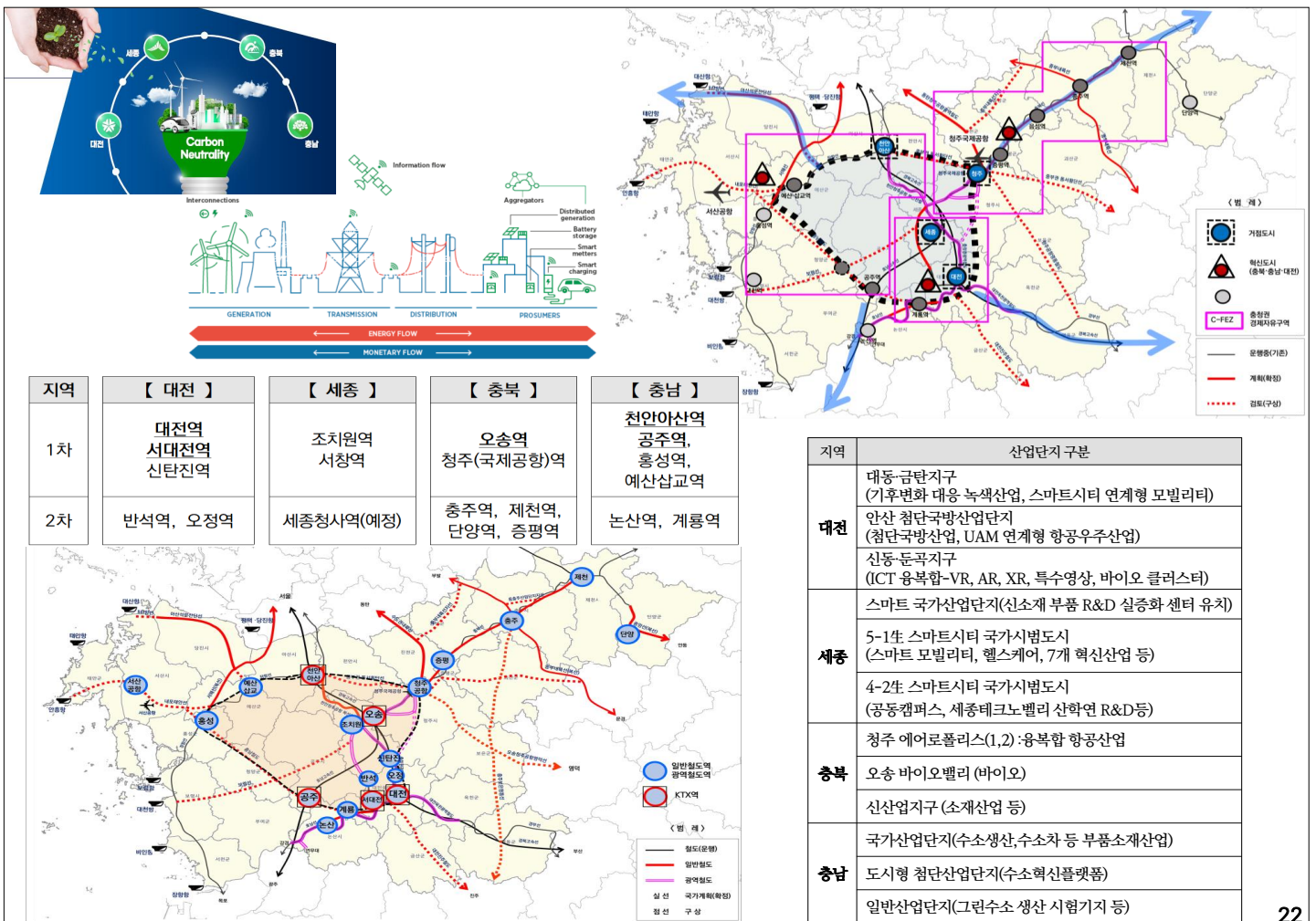
- ❖ (대전) 중부권 그린뉴딜 3대 프로젝트
- ❖ (충남)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
- ❖ (충북) 그린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거점 조성

I1-3. 충청권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

- I1-3-① 충청권 철도망 연계 주요 철도역사 활용 거점형 복합용도개발 추진
- I1-3-② 충청권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주변 창업단지 조성

- ❖ (대전) 중부권 메가스포트 콤플렉스 조성
- ❖ (세종) 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 ❖ (세종) 충청권국립대 통합 공동운영
- ❖ (충북) Korea 청년창업특구 조성
- ❖ (충남) 가창충남청년벨트 조성-중장기 과제

21



22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전략 I2.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향]

-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 완성**
 -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남북축 도로망 보완 및 동서축 도로망 대폭 확충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 도로망 확충 및 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 대도시권 혼잡완화 및 주변도시 연계를 위한 순환고속도로망 구축
- **충청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 구축**
 - 주요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접근성 높은 간선철도망 구축
 - 청주공항, 대산항 등 거점시설과의 철도 연계성 강화
 - 대전세종청주 대도시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 대도시권 주변 광역간선급행버스(BRT) 운행 확대
 - 지역거점 교통시설 및 환승시설 건설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버스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 충청권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MaaS) 플랫폼 구축



[사업구성]

I2-1.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 완성

I2-2. 충청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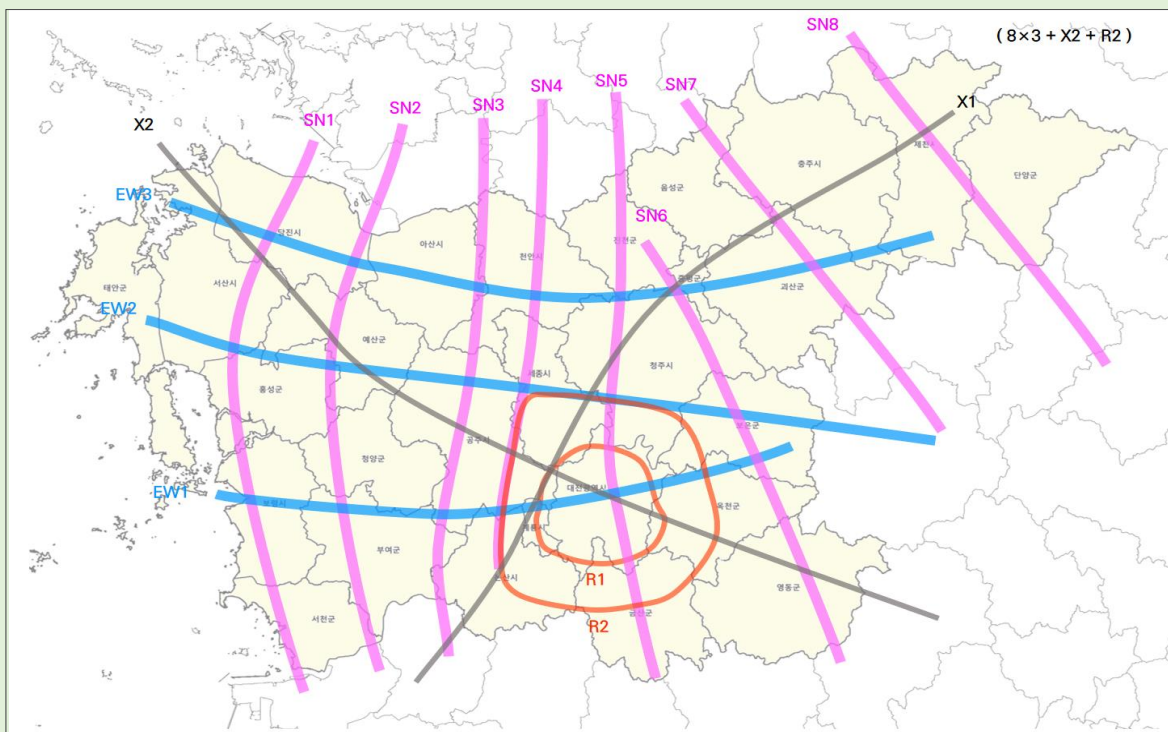
I2-3.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23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교통망 골격 구성]

- $(8 \times 3 + X2 + R2)$ 남북축 8개, 동서축 3개와 2개의 X축, 2개의 순환망으로 교통망 골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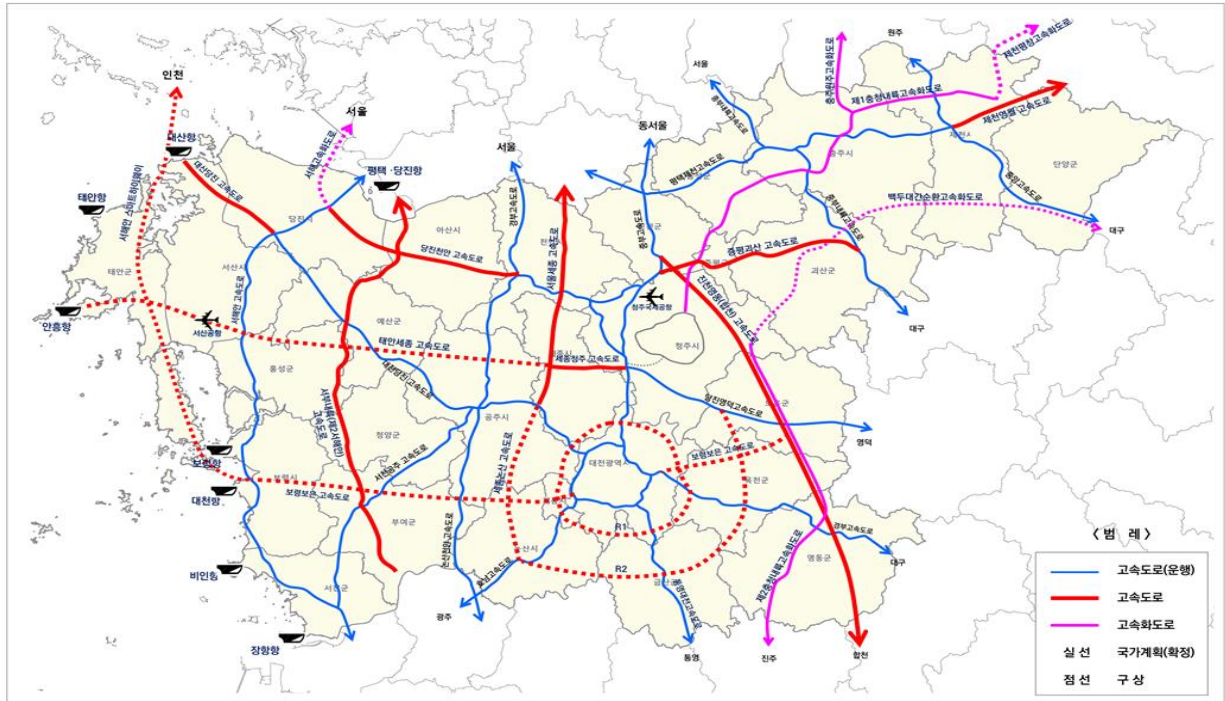


24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전략 I2.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 I2-1.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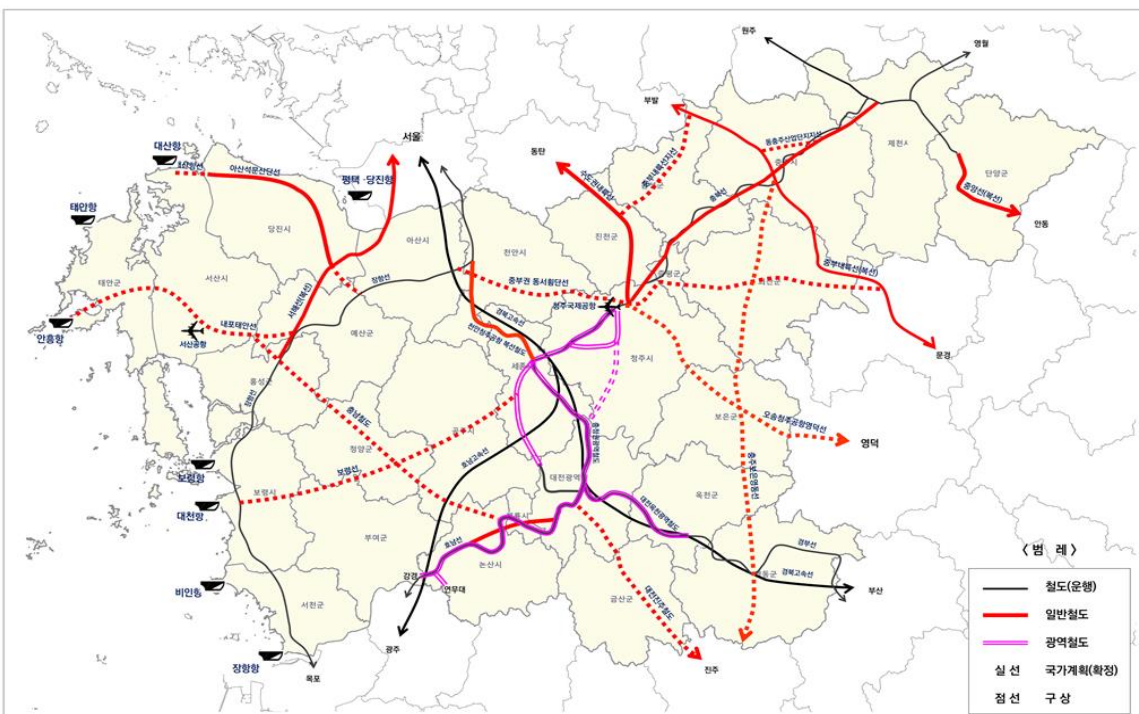


25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전략 I2.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 I2-2. 충청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 구축



26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전략 I3. 충청권 스마트리전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 [배경/목표]**
- 초광역 차원의 충청권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함
 - 이는 충청권의 종래 S.O.C를 비롯하여 **생활밀착형 S.O.C**와 **자연환경**(녹지, 수자원, 대기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임

[사업구성]

I3-1. 충청권 스마트 생활 S.O.C 통합관리 체계 구축

- I1-1-①. 충청권 광역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I1-1-②. 충청권 광역 보건 의료 지원체계 구축
- I1-1-③. 수자원(공업용수/생활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I1-1-④. 충청권 먹거리뉴딜 정책 연계 푸드네트워크 구축

I3-2. 충청권 스마트 자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 I1-2-①. 충청권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 I1-2-②.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
- I1-2-③. 충청권 대기관리(미세먼지) 플랫폼 구축사업

I3-3. 충청권 초광역 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 I1-3-①. 친환경 수소 특화형 UAM R&BD 플랫폼 구축
- I1-3-②. 스마트리전 연계 그린UAM 전문인력 양성
- I1-3-③. 중부권 도심형 항공교통(UAM) 특화단지 조성

❖ (충남) 재난안전사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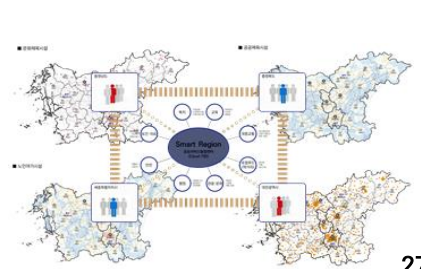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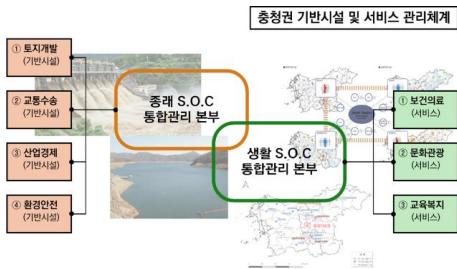
❖ (충북) 친환경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① 충주댐 권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 ② 대청댐 권역 수열에너지 특구 조성

❖ (충남) 지방하천 정비 등 국가지원 확대

❖ (대전) 중부권 그린뉴딜 3대 프로젝트

❖ (충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그린 K-UAM 실증기반 생태계 조성



27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충청민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강화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메가시티

공동체; Community

사회문화 분야 전략 Social & cultural

전략 S1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실행력 강화

- 사업 S1-1. 충청권 스토리메이킹 활용을 위한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 사업 S1-2. 충청권 문화관광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사업 S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기능 확대 및 충청권광역관광본부 신설
- 사업 S1-4. 중부권 광역문화재단 협의체 신설에 따른 금강 자원 활용

전략 S2

충청권 문화관광 국제화 및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사업 S2-1.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를 거점으로 R&D 특화 MICE 산업 육성
- 사업 S2-2. 충청권 대표 관광 거점도시 육성
- 사업 S2-3.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개발
- 사업 S2-4. 충청권 광역시티투어 운영

전략 S3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S3-1. 충청권 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시민 문화향유 증대
- 사업 S3-2.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 사업 S3-3. 대청호 국립호수생태자원관 건립
- 사업 S3-4. 충청권 삼·호수 국제 비엔날레 추진

28

03.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의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전략 S1.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실행력 강화

[배경/목표]

- 일시적 활용 목적(예: 2010 대충청방문의해)이 아닌 반영구적 사용 목적의 충청권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
- 충청권 문화관광 광역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보 필요성
- 충청권 연대와 협력 사업을 위한 광역 차원의 협의회 또는 협의체 활용의 중요성



[사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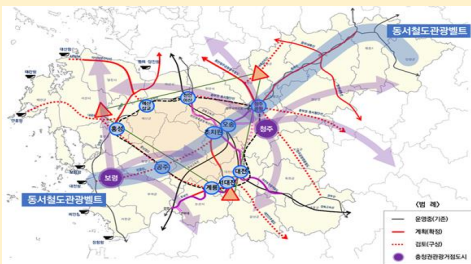
S1-1. 충청권 스토리메이킹 활용을 위한 문화관광 통합브랜드 구축

S1-2. 충청권 문화관광 데이터 플랫폼 구축

S1-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체 운영 기능 확대 및 충청권 광역관광본부 신설

S1-4. 중부권 광역문화재단 협의체 신설에 따른 금강자원 활용

- ##### [기대효과]
- 통합 브랜드를 통한 긍정적 효과(예: 이미지 강화, 동질성 및 정체성 강화, 상품화 및 수익 창출 등) 도모 가능
 -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청권 문화관광 DB 활용의 폭 강화 가능
 - 충청권 광역문화관광 사업의 규모 확대와 실행 기회 강화 및 금강 수계의 선형 네트워크 구축 강화



29

03.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의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전략 S2. 충청권 문화관광 국제화 및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배경/목표]

- 충청권의 국제도시로서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에 미치는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MICE 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
-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충청권 핵심도시 중심의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필요
- 관광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내외의 관광객 만족도 제고

[사업구성]

S2-1.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거점으로 R&D 특화 MICE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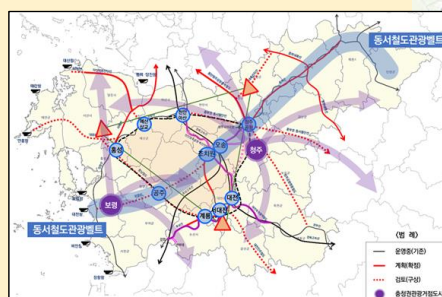
S2-2. 충청권 대표 관광 거점도시 육성

S2-3.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개발

S2-4. 충청권 광역시티투어 운영

[기대효과]

- 미래신산업 기반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통해 충청권의 MICE 산업 강화
-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충청권 방문 확대와 지방분산 및 지역 관광 균형 발전 기여
- 충청권 방문 국내외의 관광객의 이동편의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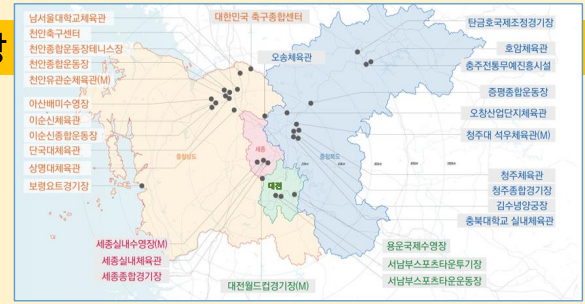


30

03.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의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전략 S3.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충청권 문화관광자원의 적극적 활용 필요
-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한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필요
- 금강문화권의 상징적 장소인 대청호의 가치 및 의미 부여 필요
- 섬 지역과 호수 주변 지역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수단 필요



[사업구성]

S3-1. 충청권 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시민 문화향유 증대

S3-2.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S3-3. 대청호 국립호수생태지원관 건립

S3-4. 충청권 섬·호수 국제 비엔날레 추진

[기대효과]

- 충청권 대표 문화자원의 국제화를 통한 인지도 및 국내외 관광객 유인력 제고
- 메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과 광역생활경제권의 디딤돌 마련
- 국가 대표 인공호인 대청호 관련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지역 갈등 해소
- 섬과 호수의 관광자원 가치와 기능의 재생산 또는 재창출로 인한 충청권 국제적 명소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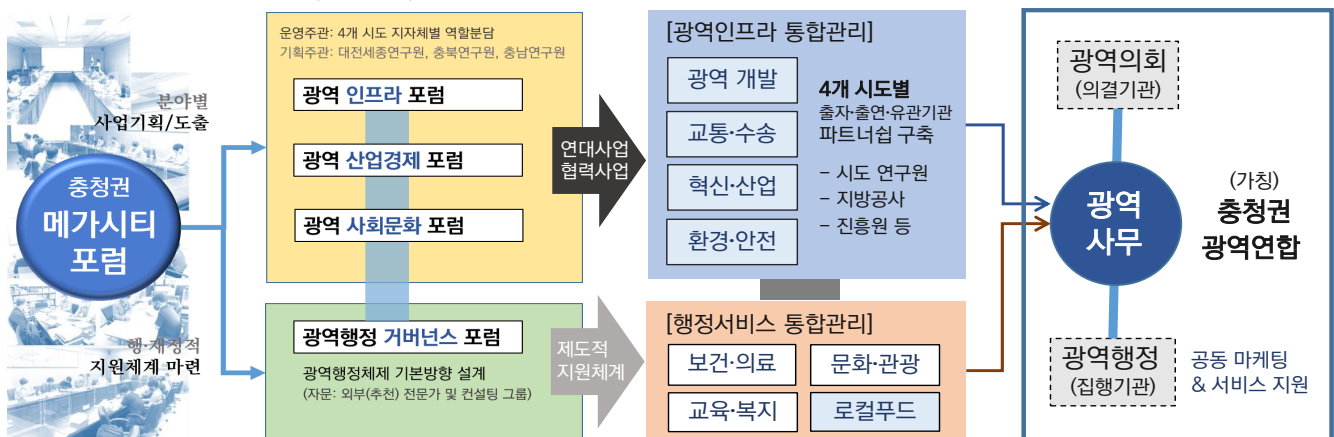
[연계사업]

- (대전 대선공약 사업) 중부권 메가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 (충북 대선공약 사업) 청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충남 대선공약 사업)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

06. 충청권 메가시티(MCR) 추진 로드맵

▶ 충청권 메가시티(MCR) 포럼 운영 (2021.5~)

-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 그룹(담당공무원) 협업



[1 단계]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22~2023년)

- 기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기능 확대
- 행정안전부 한시지구 승인 절차 이행 / 1국 2과

[2 단계]

충청 광역청 설립·운영
(2023~2024년)

- 충청 광역특별청 출범(특별지방자치단체)
- 광역행정통합 기반구축 (집행기관+의결기관)
: 광역사업 추진, 통합(상생)연구센터 신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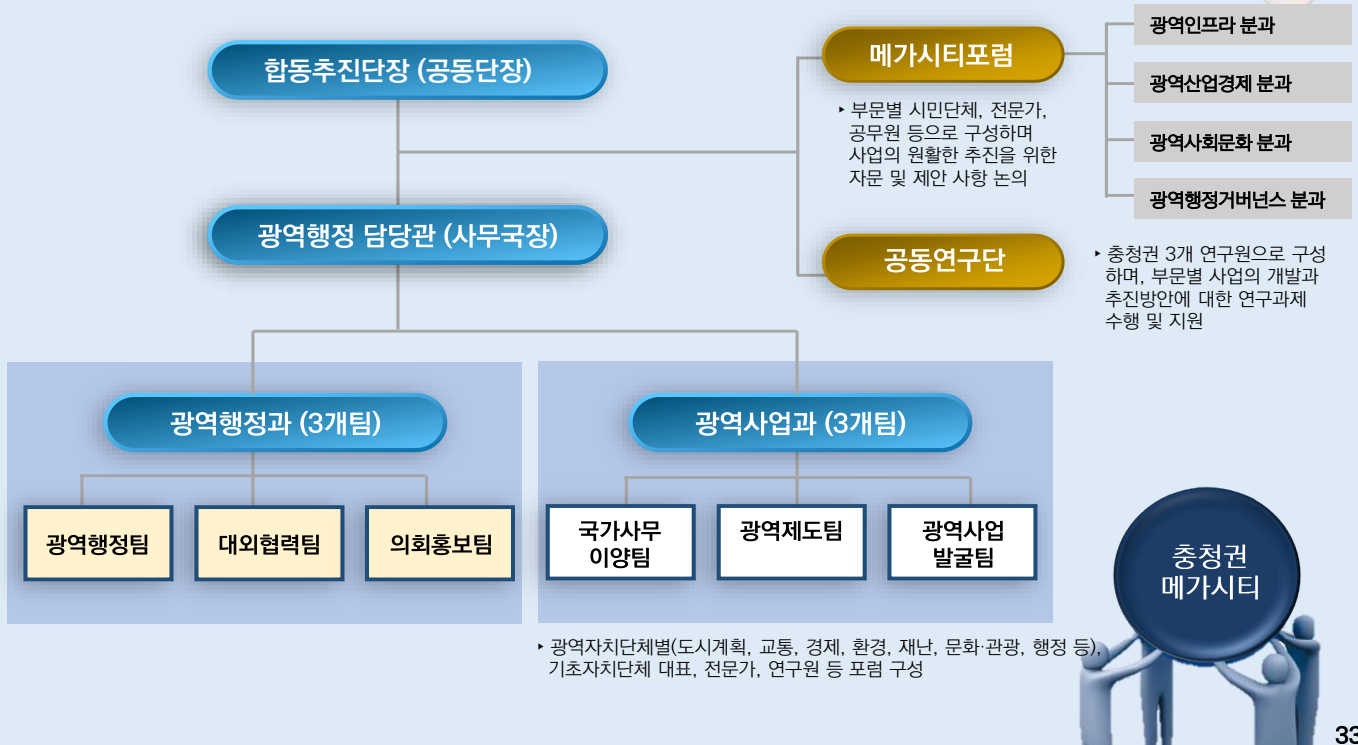
[3 단계]

충청 행정구역 통합
(2025년~)

- 충청권 메가시티(MCR) 조성
-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제정

제 1단계 : 충청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2023년)

[충청광역시청 합동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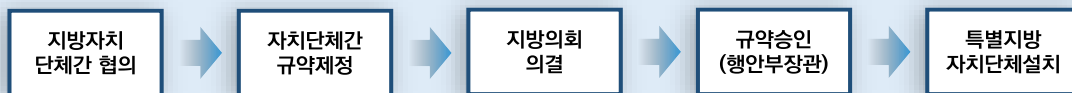


33

제 2단계 : 충청 광역청 설립 · 운영 (2023~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근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
-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의회, 사무국, 집행기구들로 구성된 충청광역청설치



- (사무) 법령과 자치사무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한 사무처리
- (규약)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 지방의회 조직·운영 및 의원선임방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및 지출방범, 사무처리 개시일, 특별회계 설치, 기타 세부사항 포함
- (재원) 지자체 분담금으로 조성, 사용료, 수수료 징수

[충청광역청 출범]

- (가칭) 충청광역청을 설립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설립·운영
- 광역사업 연구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내에 충청권연구센터 신설, 계획수립지원
- 광역사업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



34

제 3단계 :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2025년~)

[기본방향 및 역할]

- 충청권행정구역 통합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결과 반영
-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협력을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및 본부 설치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도]



35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6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방만기 전임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2021. 12. 8.

방만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목차

CONTENTS

I

문제제기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III

제도개혁의
필요성

IV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1. 문제제기



금융 양극화 문제 및 지역 불균형 완화

- 수도권과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짐
(금융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으며, 계층간 가구소득의 격차가 더 심함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 서민금융을 소비적 측면이 아닌 생산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경제난 및 고용문제개선의 중요수단으로 전환해야 함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광역 지자체 역할 강화

- 2020년 말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60.1%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이 70%인 것에 비하면 10% 정도를 높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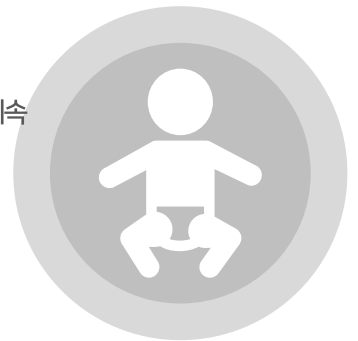
3

I. 문제제기

지방소멸과 지방은행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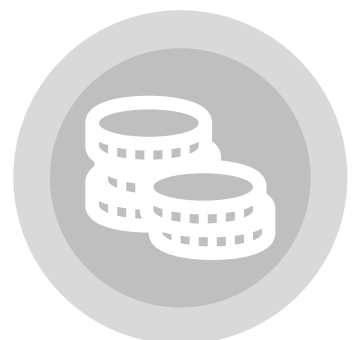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위기, 지역인구격차 확대

- 세계유래 없는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고령인구수가 유소년 인구수 초월, 20년 동안 1.3명 초저출산 지속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중에서 1.0미만인 유일한 나라)
- 2019년 기준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전체 11.8%,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거주
 -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음 (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30%)



지방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 고리 역할
 - 중소기업 위주의 지방 기업에 금융을 공급
 - 고용 창출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기능
 -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노동력을 지역으로 유인



4

지역경제위기, 지역소득격차 및 불평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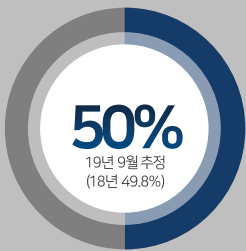
-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꾸준히 하락, 저성장 고착화,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이 분화되면서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 수도권에 1,000대 기업본사의 73.6%, 100대 기업 본사의 91% 집중(균형위, 2018)
- 수도권의 GRDP가 비수도권을 상회, 국세 55.1%가 수도권에 집중
- 외국은 지역간 불균형 완화 vs.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지수 악화(GRDP 지니계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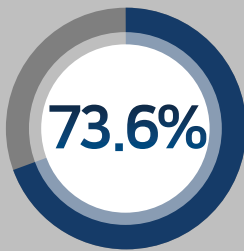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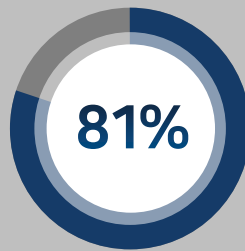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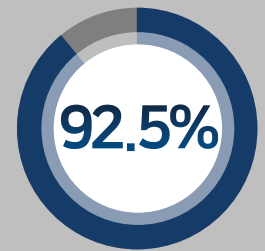
1000대 기업



신용카드 사용액



서비스 접근성 취약



18년 기준, 출처: 통계청 / 16년 기준, 출처: 부산상의 / 15년 기준, 출처: 한국은행 / 16년 기준, 출처: 농경연

5

경제발전에서 금융의 역할

(1) 신고전학파적 균형이론 vs. 수요견인 성장이론

- 완전균형모델 vs. 수출 및 투자주도형 경제성장

(2) 수요견인 성장이론

- 투자-고용의 선순환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vestment and Money, 1936)

(3) 양극화이론

- (가정) 양극화된 지역, 요소이동의 불안전성, 독과점시장구조
- 중심지로부터의 Trickle-Down-Effects와 취약지역의 Back-Wash-Effects



금융에서 지역 관점의 중시

(1) 지역에서 경제적 네트워크 중시

- 지역성이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주요한 요인 (예) 폴 크루그먼의 New Economy Geography
- 생산 클러스터, 경제적 네트워크, 집적된 산업지역의 분위기 효과

(2) 독립된 지역이론

- 병목현상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 지역 특화성, 지역내 순환경제의 중요성
(Hahne, U. 198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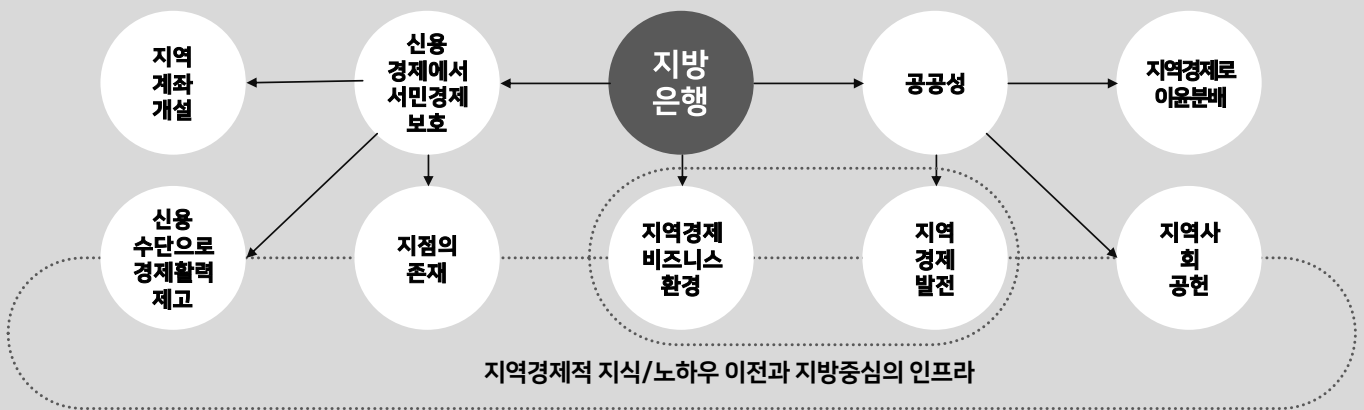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지방은행의 역할

지방은행 역할의 체계

- (1) 공적은행으로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
- (2) 지역주주에게 이윤을 환원하며, 지역경제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금융으로 지원
- (3) 수익 중심의 비즈니스 영업

지역경제에 있어 지방은행의 역할



자료 : Gärtner, Stefan, Sparkassen als Akteure einer integrierten Regionalentwicklung : Potential für die Zukunft oder Illusion? 2003에서 일부 인용

7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충청권 역외유출의 심화

GRDP에서 역외유출 규모

- (유량) 역외유출의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1위), 전라남도(2위), 경상남도(3위), 충청북도(4위), 인천광역시(5위), 경상북도(6위), 강원도(7위), 전라북도(8위) 등의 순

17개 시도 역외유출 및 역외유출률 비교

구분	지역내총생산 (명목, 백만원)		지역총소득 (본원소득, 백만원)		역외유출		역외유출률		역내유입률	
	(A)	(순위)	(B)	(순위)	(B-A)	(순위)	(1-B/A)%	(순위)	(B/A)%	(순위)
서울특별시	435,927,212	2	470,478,107	2	34,550,895	16	-79	13	107.9	5
부산광역시	93,012,134	6	98,683,113	4	5,670,979	13	-61	10	106.1	8
대구광역시	58,094,694	11	67,379,375	8	9,284,681	15	-160	17	116.0	1
인천광역시	90,040,500	7	96,777,670	5	6,737,170	14	-75	12	107.5	6
광주광역시	41,519,553	15	46,578,129	14	5,058,576	12	-122	16	112.2	2
대전광역시	43,092,218	14	47,625,362	13	4,533,144	11	-105	15	110.5	3
울산광역시	74,654,628	9	62,132,385	10	-12,522,243	5	16.8	4	83.2	14
세종특별자치시	11,855,276	17	12,644,683	17	789,407	10	-6.7	11	106.7	7
경기도	477,413,452	1	515,333,179	1	37,919,727	17	-7.9	14	107.9	4
강원도	48,822,640	13	44,583,799	15	-4,238,841	7	8.7	6	91.3	12
충청북도	69,419,635	10	56,715,604	11	-12,704,031	4	18.3	2	81.7	16
충청남도	113,488,325	4	89,892,472	7	-23,595,853	1	20.8	1	79.2	17
전라북도	51,997,535	12	51,037,372	12	-960,163	8	1.8	8	98.2	10
전라남도	76,948,280	8	63,245,921	9	-13,702,359	2	17.8	3	82.2	15
경상북도	106,805,459	5	93,363,614	6	-13,441,845	3	12.6	5	87.2	13
경상남도	114,020,931	3	107,306,055	3	-6,714,876	6	5.9	7	94.1	11
제주특별자치도	20,308,737	16	20,254,268	16	-54,469	9	0.3	9	99.7	9

자료 : 통계청, 지방계정(2019년 확정치 반영)

8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역외유출의 심화

(예시) 충청권 역외유출의 심화

- (저량) 충남의 경우에는 전체 수신액의 9%~11%가량이 역외로 유출
- 강원도 경우 수신액의 30%가량이 역외로 유출
⇒ 이 지역에 은행이 설립되면 +9~30% 수준의 자금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자금 역내유입 규모 추이

수도권			2010년	2015년	2020년
수신	예금은행		629,516	805,287	1,202,055
	비은행		478,518	864,272	1,429,217
	저축은행		53,510	28,029	64,338
	신협		13,437	17,505	31,460
	새마을금고		29,618	42,314	81,879
	합계		1,108,033	1,669,558	2,631,271
여신	예금은행		692,207	879,085	1,248,074
	비은행		175,503	190,777	328,770
	저축은행		47,302	28,462	65,074
	신협		9,500	12,960	25,101
	새마을금고		17,918	26,999	62,427
	합계		1,800,240	2,548,643	3,879,346
역외유출율(%)			-0.62	-0.53	-0.47

충남 자금 역외유출 규모 추이

충남			2010년	2015년	2020년
수신	예금은행		14,374	22,462	27,670
	비은행		28,394	35,252	52,171
	저축은행		1,197	531	968
	신협		2,787	2,946	4,584
	새마을금고		3,170	4,604	7,186
	합계		42,768	57,714	79,841
여신	예금은행		22,875	32,255	41,097
	비은행		15,425	18,920	31,163
	저축은행		881	692	1,089
	신협		1,910	2,102	3,519
	새마을금고		1,883	3,133	5,777
	합계		38,299	51,175	72,260
역외유출율(%)			0.10	0.11	0.0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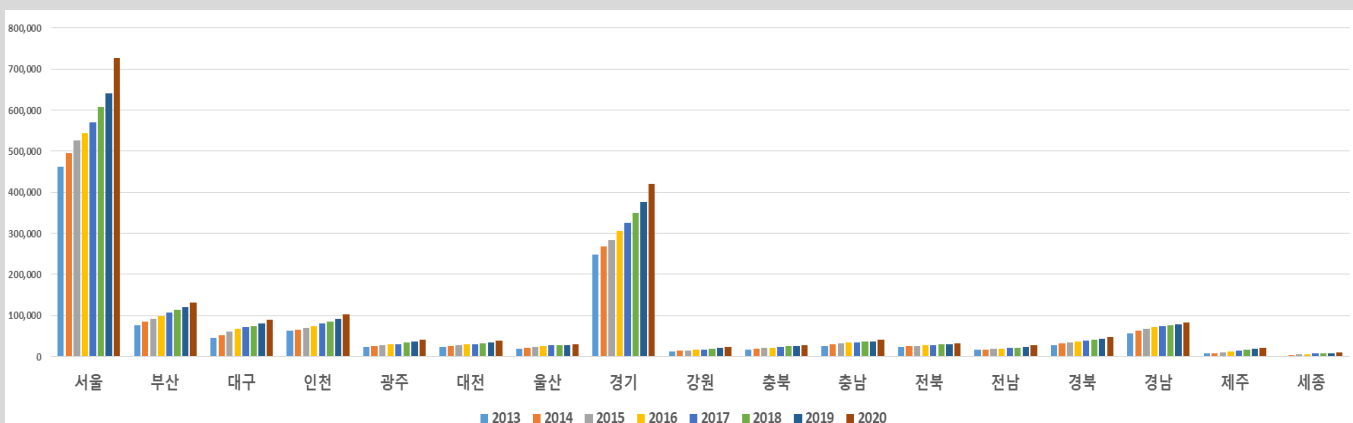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금융의 수도권 집중현상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 신용창출 집중 현상

- 지역별 경제규모는 서울(24.1%), 경기(21.9%), 경남(6.7%), 충남(6.5%), 경북(6.3%), 부산(5.4%), 인천(4.7%), 전남(4.0%), 대구(3.8%), 충북(3.2%), 전북(3.1%) 수준
- 신용창출: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인천 > 경남 > 경북 순
⇒ 경제규모에 비해 신용창출 수준이 낮은 지역은 지방은행이 없는 경우임(충남, 충북, 강원 등)

신용창출 규모



자료 : 오대원(2021)

10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간 금융서비스 불균형

지역별 인구수와 점포당 인구수 비교

- 서울은 점포당 인구 5천명 미만인데 반해 강원, 충청, 인천지역의 경우 2020년 기준 점포당 약 1만명으로 감당하고 있음

⇒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금융서비스 공급의 부족 현상

지역별 인구수 및 점포당 인구수 비교

구분	2018		2019		2020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
서울	9,765,623	4,661.4	9,729,107	4,736.7	9,668,465	4,960.7
부산	3,441,453	6,058.9	3,413,841	6,052.9	3,391,946	6,460.8
대구	2,461,769	6,726.1	2,438,031	6,772.3	2,418,346	7,071.2
인천	2,954,642	9,624.2	2,957,026	9,695.2	2,418,346	10,182.8
광주	1,459,336	7,721.4	1,456,468	7,747.2	2,942,828	8,011.4
대전	1,458,936	8,465.5	1,474,870	8,476.3	1,450,062	9,092.4
울산	1,155,623	8,138.2	1,148,019	8,084.6	1,463,882	8,541.5
경기	13,077,153	10,051.6	13,239,666	10,153.1	1,136,017	10,639.5
강원	1,543,052	10,943.6	1,541,502	11,010.7	13,427,014	11,180.0
충청	3,725,534	11,323.8	3,723,716	11,284.0	1,542,840	11,558.6
전라	3,719,802	10,080.8	3,687,662	9,860.1	3,721,866	9,960.9
경상	6,050,819	9,280.4	6,028,389	9,360.9	3,655,653	9,770.7
제주	667,191	7,849.3	670,989	7,894.0	5,979,638	8,328.8
세종	314,126	7,305.3	340,575	7,568.3	355,821	8,275.1
평균	3,701,861	8,445.0	3,703,562	8,478.3	3,702,073	8,859.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1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지방은행 부재지역에서 설립의 필요성

지방은행의 지역 재투자 성과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면에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

⇒ 지역은행이 설립되면 지역재투자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종 등급
대구	우수	최우수	-	다소미흡	양호	-	-	-	-	-	최우수	다소미흡	-	우수
부산	최우수	다소미흡	-	양호	우수	-	-	-	-	-	-	최우수	-	최우수
광주	-	-	최우수	-	-	-	-	-	-	우수	-	-	-	최우수
제주	미흡	-	-	-	-	-	-	-	-	-	-	-	최우수	우수
전북	-	-	-	우수	-	-	-	미흡	최우수	-	-	-	-	최우수
경남	우수	다소미흡	-	-	최우수	-	-	-	-	-	양호	최우수	-	최우수

12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충청권 지방은행 성격 정립의 필요성

중금리 신용대출 공백과 신용리스크 분석 취약

- 제1금융권 상업은행에서 대출가능 등급은 일반적으로 5등급 이상
-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저금리 담보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로 양극화
⇒ 중금리 신용대출시장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 부분에서 초과자금수요가 상존

금융기관별 신규고객의 신용등급 분포

(예시)충청권 경제활동인구와 사금융 이용자 추정

단위 : 천명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10
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충청권역	경제활동인구	사금융 이용자 추정치
대전	812	21.9
충남	1,254	33.9
충북	930	25.1
세종	192	5.2
합계	3,188	86.1

13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충청권 지방은행 성격 정립의 필요성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지역경제 낙후 등 상대적 상실감 내재

- 2018년 현재 지역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금액면에서 볼 때 부산(62.1조원), 대구(45.1조원), 경남(46.8조원)에 못 미치는 20.2조원 규모
- 1개 업체당 대출금액 규모 역시 1.2억원 규모로 부산(2.2억원), 대구(2.1억원), 경남(1.7억원), 광주(1.6억원), 제주(1.3억원), 전북(1.2억원)에 이어 7위 수준

주요 시도별 기업대출금 현황

구분	사업체수(개)	대출금액(십억원)	1개 업체당대출금액(십억원)
부산	288,860	62,124.8	0.215131
대구	210,547	45,171.7	0.214544
경남	281,685	46,891.7	0.166469
광주	119,617	18,551.9	0.155094
제주	62,871	8,123.4	0.129207
전북	151,011	17,774.1	0.117701
충남	172,242(4위)	20,198.2	0.117266(7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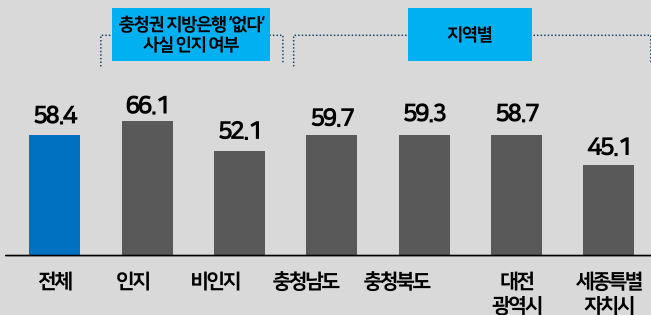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충청권 지방은행 성격 정립의 필요성

설문 결과

- 충청권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충청권 도·시민의 58.4%가 필요하다고 인지(2021.6 설문 결과)
- 소상공인 및 서민 계층 지원(33.7%),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24.9%),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20.8%),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공헌 활동(15.1%)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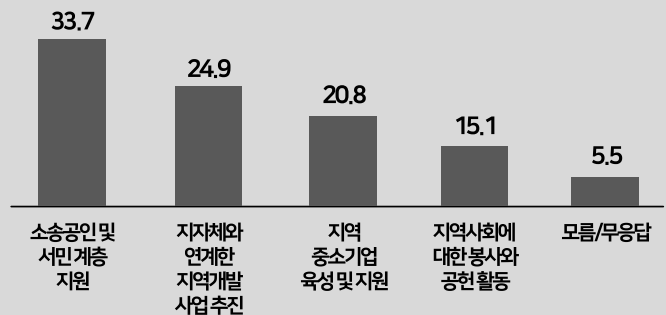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충청권 지방은행 필요 이유(n=584, 단위: %)

충청권 지방은행 불필요 이유(n=314, 단위: %)

충청권 지방은행이 필요한 이유(설문조사)



15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예시) 충청권 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 충남에만 설립하는 것(시나리오 1)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모두 포함하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시나리오 2) 하는 경우 모두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발생
- (시나리오 1) 생산 3.5조원, 부가가치 1.9조원, 고용 1.910명
(시나리오 2) 생산 3.5조원, 부가가치 2조원, 고용 2.086명

충청권 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1		Scenario #2	
	(백만원)	(비율)	(백만원)	(비율)	(백만원)	(비율)	(백만원)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대전	14,534	3.0%	128,150	27.2%	8,232	3.3%	73,641	28.9%	124	4.6%	771	27.3%
세종	2,998	0.6%	10,243	2.2%	1,654	0.7%	7,031	2.8%	20	0.7%	46	1.6%
충북	4,642	1.0%	91,394	19.4%	1,922	0.8%	50,360	19.8%	28	1.0%	635	22.5%
충남	331,357	69.5%	119,570	25.4%	182,044	71.9%	64,785	25.4%	1,739	65.1%	634	22.5%
충청권	353,531	74.1%	349,357	74.1%	193,852	76.6%	195,818	76.9%	1,910	71.5%	2,086	73.9%
기타지역	123,278	25.9%	121,858	25.9%	59,335	23.4%	58,834	23.1%	760	28.5%	737	26.1%
전국합계	476,809	100.0%	471,215	100.0%	253,187	100.0%	254,652	100.0%	2,669	100.0%	2,823	100.0%

자료: 범민기/이인재/이종윤, 충남연구원 자체 연구로 추정 (2021)

16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해외 사례-독일

독일 지역 금융의 역할

- 독일에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금융의 역할은 매우 큼
-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독일 저축은행의 경우 기관수(24.8%), 지점 수(34.6%), 종업원수(36.5%)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저축은행은 해당 지자체 지역에 국한되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의(Regionalprinzip) 적용을 받음)

독일 시중은행 현황

시점 : 2020년 말 기준, 매출액 단위 : 10억 유로, 괄호안은 비율

은행 그룹별	기관 수	지점 수	종업원 수	매출액
시중은행 전체	1,519(100%)	24,060(100.0%)	549,895(100.0%)	9,002.1(100.0%)
(민영) 상업은행	270(17.8)	6,453(26.8%)	151,600(27.6%)	3,753.3(41.7%)
대형은행	3(0.2%)	5,146(21.4%)	n.a.	2,164.7(24.0%)
지방은행 및 기타은행	151(9.9%)	1,142(4.7%)	n.a.	1,160.7(12.9%)
외국은행	116(7.6%)	165(0.7%)	n.a.	427.8(4.8%)
주립은행	6(0.4%)	210(0.9%)	27,150(4.9%)	807.4(9.0%)
저축은행	377(24.8%)	8,318(34.6%)	200,700(36.5%)	1,463.7(16.3%)
신용협조합	818(53.9%)	7,765(32.3%)	138,150(25.1%)	1,072.7(11.9%)
주택건설은행	18(1.2%)	1,259(5.2%)	19,376(3.5%)	244.9(2.7%)

자료 : 1. 기관 수, 지점 수, 종업원 수는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September 2021, 2. (대차대조표의) 매출액은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Februar 2021

17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해외 사례-독일

독일 저축은행 특징

가계 및 중소기업 부문의 높은 시장점유율

- 독일저축은행은 독일 전역의 지점들을 통한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5천만명의 개인 및 독일 기업의 75%를 고객으로 확보
 -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최근 5년간 시장 점유율이 5.2%p 상승(38.0%→43.2%)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큰 강점을 보유

개인대출시장에서의 영업전략

-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lifelong relation banking"을 목표로 고객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령별로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구성
 -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확보에 주력
 - 예금과 대출, 기타 자산관리상담은 Private Banking 형태로 전문가들이 고객을 위한 컨설팅 형태로 진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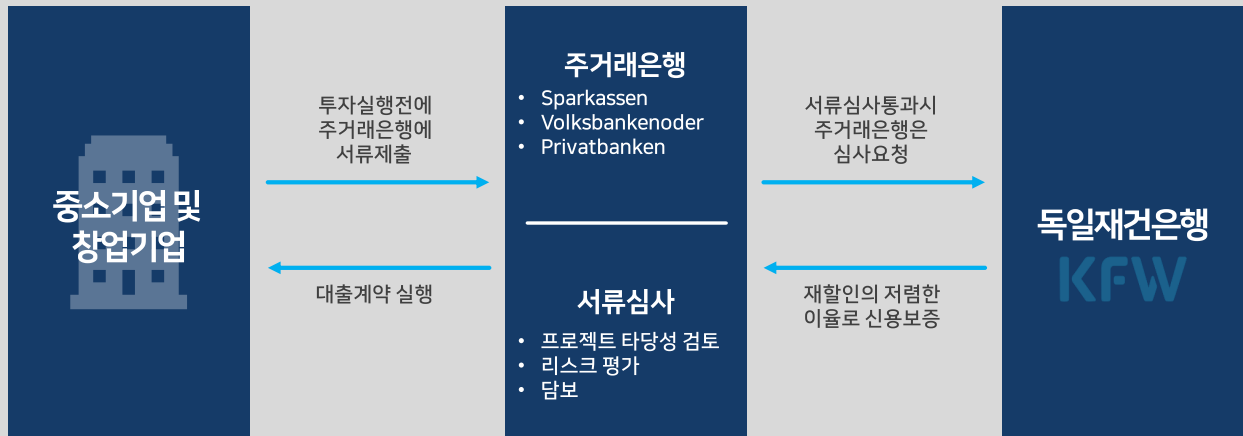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해외 사례-독일

독일에서 지방 중심의 중소기업육성 프로그램 예시

- 창업 및 중소기업은 투자개시 전에 주거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주거래은행은 국책은행인 kfw (독일재건은행)에 서류를 전달함
- Kfw는 주거래은행에 위험을 담보하고, 주거래은행은 타당성, 리스크, 담보 등을 심사

독일의 지방중심의 중소기업 프로그램



자료 : 'Unternehmenskredit', KfW Mittelstand(2004)

19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해외 사례-미국

미국 지역재투자법

(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지역재투자법 도입 배경

- 1977년 특정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의무화한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제정

지역재투자법 주요 내용

- (대상기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이 지역재투자법 적용
- 직전 2개의 연도 말 자산규모가 각각 1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의 주택모기지대출, 소기업, 소농 대출 및 지역사회 개발 대출 실적을 다음해 3월 1일까지 감독기관에 보고 의무화

자료 : 강다연,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2018.4.2)

20

II.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효과

해외 사례-미국

지역재투자법 평가 항목

- 감독기관은 평가결과 온라인 공개, 매년 미국 각주별 소기업, 소농대출, 지역사회개발 대출 등이 포함된 지역재투자법 공시보고서(CRA Disclosure Statement) 작성
- 해당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강화
- 평가결과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감독당국은 각종 인허가 시 지역재투자법 실적 고려

지역재투자법 평가 항목

항목	평가기준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지역(assessment area) 내 모기지론, 영세사업자, 소규모 영농업자 및 소비자대출의 건수 및 금액 대출의 지리적 분포 상황(geographic distribution) 소득계층별 모기지론, 연수입 100만 달러 이하의 영세사업자 및 소규모 영농업자에 대한 대출, 이들의 당초 실행액, 소득계층별 소비자대출 등 차입자 특성(borrowers characteristics) 지역개발대출 건수와 대출 내용의 차별성 중·저소득자 및 중·저소득 지역에 대한 대출의 참신성(innovativeness) 및 유연성(flexibility)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지원시설 등 투자 대상이 지역개발 목적에 적합한 적격투자(qualified investments)의 규모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투자방식의 개발 및 지역투자활동의 수행에 있어 회계, 업무 처리 등의 어려움 정도 지역의 투자요구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모 및 신속성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 규모 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중·고소득 지역별 지점 분포 현황 지점 배치와 관련하여 지점의 개설 및 폐쇄 상황, 특히 중·저소득 지역에서의 동향 ATM, 폰뱅킹 등 소매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시스템이 저소득 지역이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 여부 저·중·고소득 지역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동 상품 등의 지역사회 수요 충족 정도

자료 : 강다연,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2018.4.2) p.4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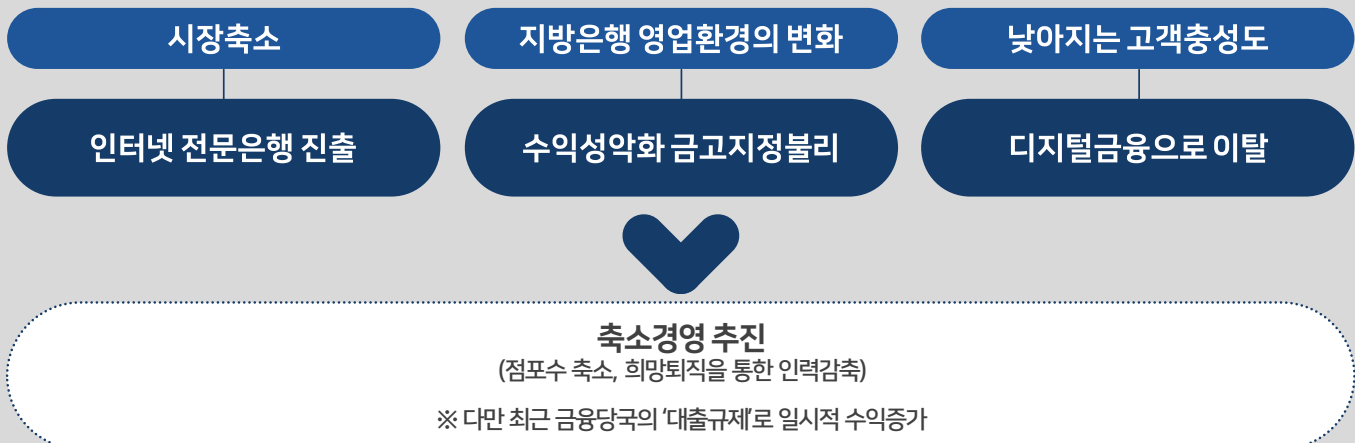
III. 제도개혁의 필요성

지방은행 영업환경의 변화

· 지방은행 전망(중장기) : 인터넷 전문은행, 디지털 금융으로 인한 도전

- 인터넷 전문은행(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과 빅테크기업의 성장(전금법이 개정되면, 빅테크기업도 종합지급결제사업가능)
- 지방은행들은 수신고 확보의 어려움(16년 10.3% → 20년 9.3% 감소)

지방은행 영업환경의 어려움



자료 : 김양중, 국내외 지방은행 신사업 사례(2021)

22

출자 및 소유에 관한 사항

은행법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은행법 시행령 별표1

① 금융위 승인 없는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제한/금지

- 금융위 승인 없는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제한/금지
 -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 (동일인의 한도) 시중은행: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지방은행: 15%
-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금융위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
 - ⇒ 한명의 개인이나 하나의 기업체가 은행의 지분 중 10% (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② 동일인의 주식 한도초과보유 규제의 예외 경우

- 정부 또는 예금은행보험공사/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에서 보유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은행 출자 및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가능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23

은산분리 제고의 필요성과 지자체 참가를 위한 법령 개정

현행법 근거와 개선방향

① (현재) 은산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즉,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를 제한이 적용됨

-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자금조달창구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재벌의 私금고화)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믿음에 기반
 -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은산분리 원칙이 느슨하게 적용되는바, 이는 私금고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
-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에서는 여신(대면접촉과 심사가 필요)보다 수신(지급결제)이 훨씬 중요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 지방은행에 예외 적용 검토 필요

② 현행법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출자·출연 가능(법률 제4조제1항제2호)
-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상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지배하는 지방공기업은 주민 편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강력하게 제한됨
 - ⇒ 은행법(제15조제1항)에서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은행 지분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은행 출자 및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가능
 - 필요시 지방은행 지분 보유 논거로 확대 · 검토

24

관련법 검토

1) 출자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

- 문제점: ① 현행법에서 국가와 예금보험공사는 출자자 제한이 없으나 지자체는 국가기관에 포함이 안됨
② 지방공기업제2조 1항에 명시안됨
⇒ 요구사항: 지자체를 국가기관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 & 지방공기업 개정

2)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관련법 개정

- 문제점: 현행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공개경쟁이 원칙

3) 대주주 구성요건 완화

- 문제점: 인터넷은행의 경우 34%까지 허용되어 있는 반면, 국가 10%, 지자체 15%로 제한되어 있음
⇒ 요구사항: 지방은행 설립시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 (지방은행 설립시 금산분리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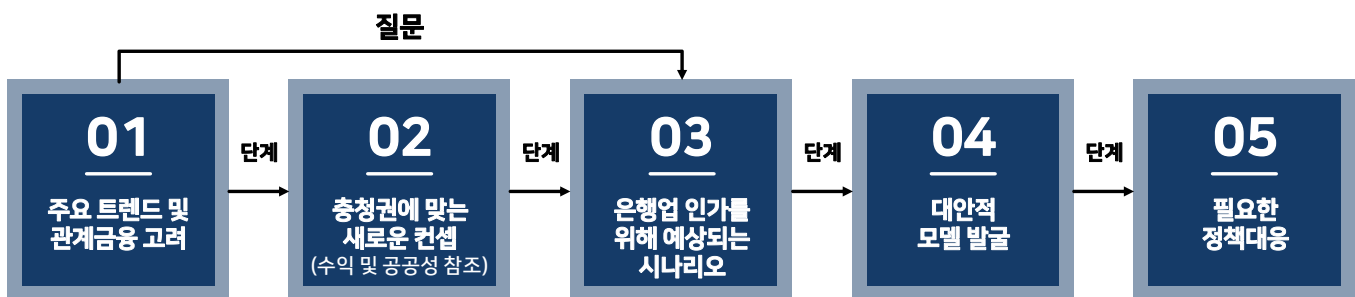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문제점: 빅테크 · 핀테크 업체들은 상대적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확장이 가능하고 지방은행 자금중개기능 약화
⇒ 요구사항: 지방은행의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 유지되도록 특례 적용

25

IV.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충청권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은행 설립방안



구 분	내 용
설립주체	지역상공회의소, 관련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설립방식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 은행 설립
설립자본금 확보	금융권 참여, 산업체-시민공모주 방식
금융지주회사 관련	금융지주회사에 속해 자금운용과 은행 영업상의 안정성 확보

26

자기자본 설립 방식

지자체, 상공회의소, 경제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본금을 조달함으로써 독자적인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예상되는 자본금 규모는 3,000억원 ~ 7,000억원 내외, 설립시 점포수는 본점(영업부 포함)과 지점 10개 ~ 30개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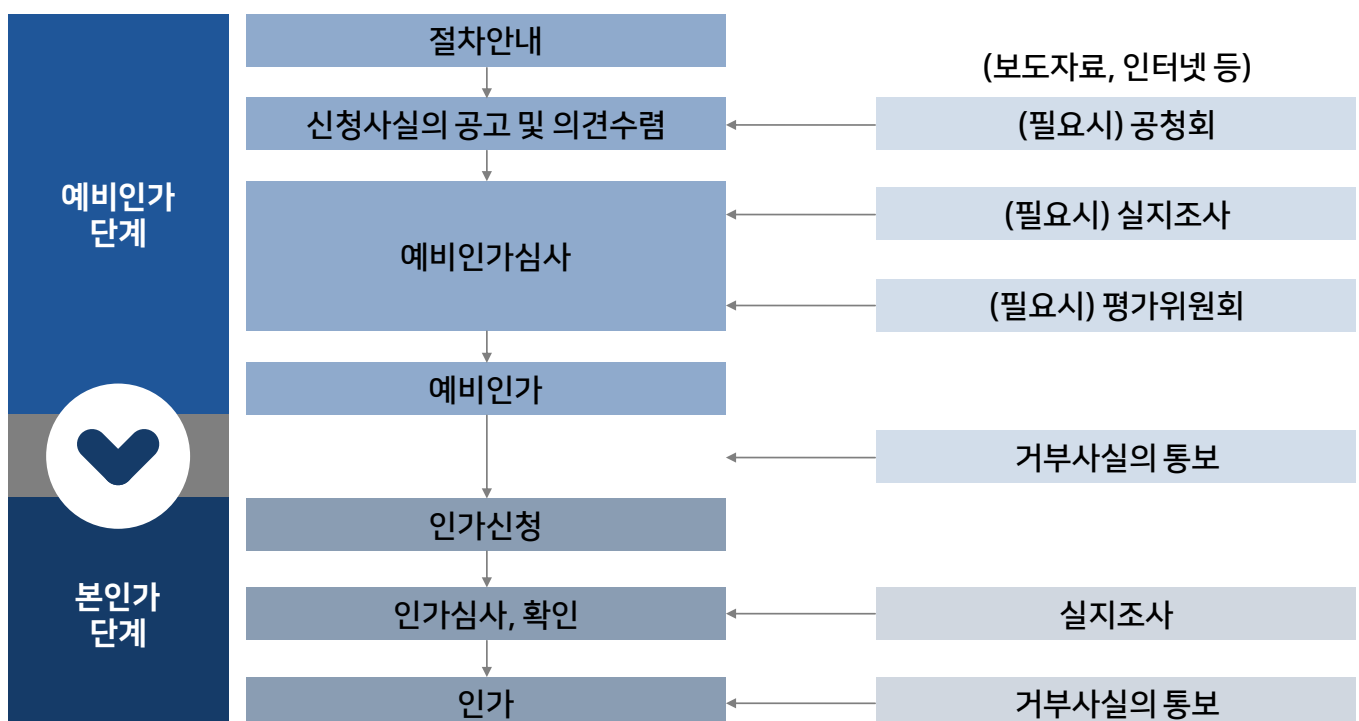
-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상 최저자본금 규모는 250억원이나, 지방은행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 억원 정도의 보통주 자본금이 필요함
- 예시로 3천억원 자본금일 경우, BIS비율 10% 준수시 수신자금을 토대로 최대 3조원대 대출이 가능한 수준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은행 설립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

- 특히 자본금 조달 및 인적, 물적 기반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2~3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외부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7

은행설립 인가절차 흐름도



28

수익모델 검토 1

서민금융 중심의 수익모델

충청권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상품 개발

- (전략)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 사이의 중간 스펙트럼 시장에 적극적인 서민금융 상품 개발
- 시장규모 추정 : 1.6조원
 - 산정근거: 충청권 대부업 이용자는 15.3만명 x 1인당 대출잔액 1,047만원)
- 수익 연평균 104 억원 예상
 - 산정근거 NIM 1.96%(지방은행 3사 평균) x 1.6조원 x 예상 시장점유율 33%

29

수익모델 검토 2

충청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대출 상품 모델

충청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개발

- (전략) 충청권 각 지역에 특화된 중소기업 대출 상품 개발
 - (예) 업종별로 지역경제구조를 반영하여 대전은 서비스업, 충남은 제조업 부문의 대출비중을 높이며 자금용도별로 운전자금의 비중을 높임
- 시장규모 추정 : 13 조원
 - 산정근거: 대전 비은행금융기관 3조원 + 충남 비은행금융기관 6.8조원 + 충북 비은행금융기관 3조원(추정) + 세종 0.2조원
- 수익 연평균 573억원 예상
 - 산정근거: NIM 1.47% x 시장규모(13 조원) x 예상 시장점유율 30%

30

수익모델 검토 3

충청권 ESG 특화대출 상품 모델

충청권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 투명성(Governance) 제고 대출 상품 개발

- (전략) 예금자에게 ESG로 사용되는 합목적적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그 대신 시장이자율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
ESG 해당 기업에게 PF 형식의 장기대출 진행
- 시장규모 추정 : 2022년 8.2조원 규모에서 2030년 13조원 규모로 증가예상
- 산정근거: 2020년말 KB 금융의 경우 ESG, 투자대출상품이 20조원 규모에서 50조원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은 목표치를 KB 금융의 25%로 가정
- 수익 연평균 2022년 362억원에서 2030년 573억원으로 성장 예상
- 산정근거: $NIM 1.47\% \times \text{시장규모} \times \text{예상 시장점유율 } 30\%$

31

수익모델 검토 4

충청권 공공은행 성격의 대출 상품 모델

충청권 사회기반시설 및 서민용 저리 대출 상품 개발

- (전략) 충청권 지자체 지정금고로 확정되고, '충청사랑' 예금상품 등으로 조달금리를 낮출 경우 사회기반시설 내지 서민용 저리(5%) 이내 대출이 가능
- 시장규모 추정 : 54.8조원 규모
- 산정근거: 2021년 기준 예산 순계(충남+충북+세종+대전) 31.7조원 + 충청권 신탁 6.9조원(20년 기준) + 충청권 새마을금고 16.2조원(20년 기준)
- 수익 연평균 843억원 이상 예상
- 산정근거: $ROA 1.54\% \times \text{시장규모} \times \text{예상 시장점유율 } 10\%$

32

전통적 수익모델 검토 : 소결

해당 지역에서 기존 비금융권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5년 이후 매년 600억원 이상 이자수익 예상

- 법인영업에서 증권 및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권의 비이자수익을 적극 활용해서 수익모델을 확대·수정할 필요
- (가칭)「충청 지역사랑 상품권」등도 비이자수익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지역화폐의 확대전략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지방은행 설립시에 초기 배당이익 포기 등으로 재투자 전략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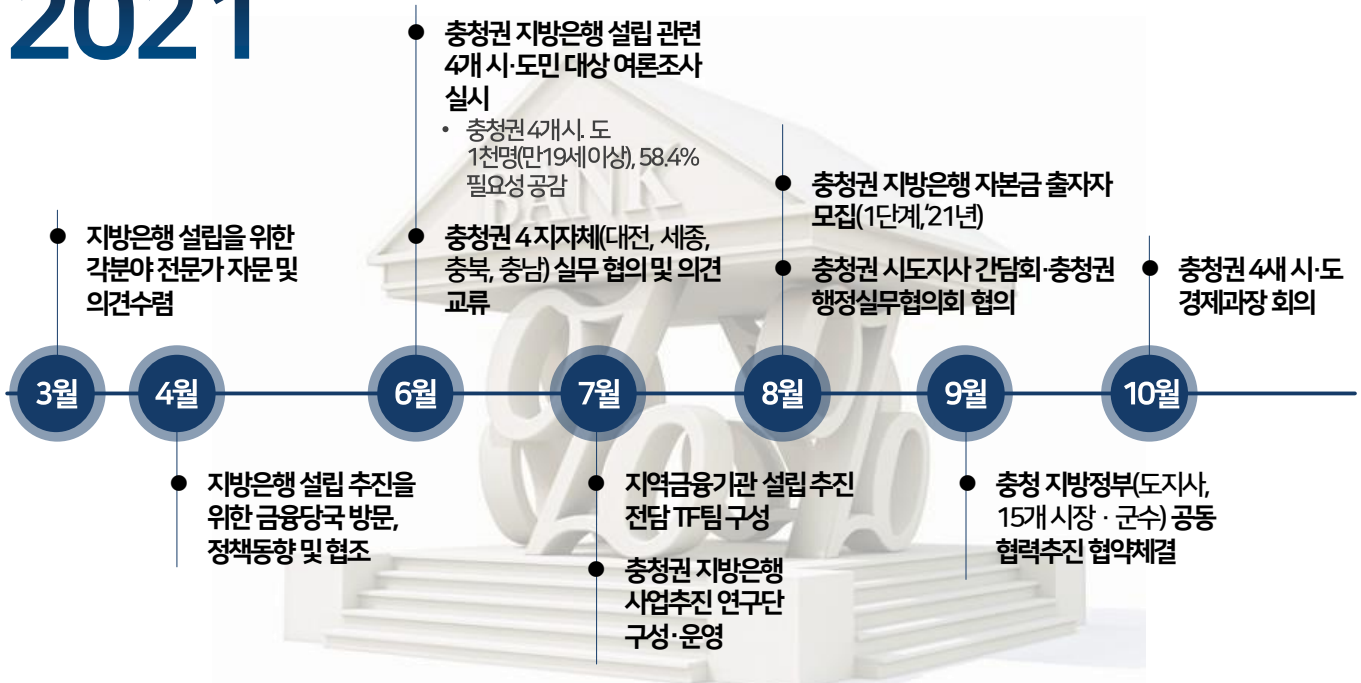
(지방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기존 비금융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 진입장벽을 할 것으로 예상

- 초기 사업유지 및 관리가 중요 : 초기 3년 적자 예상
- 초기 배당이익 포기 등으로 재투자 전략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



33

그동안 추진 상황 2021



34

향후 계획 및 일정



35

분야별 추진 전략

01

투자자 모집 및 결성

- (상공회의소, 핀테크, 빅테크 증권사포함) 도내 및 4개 충청권 출자자 모집
- 방법
 - 구성인원 : (공무원, 관련분야 유경험 외부인사 포함) 추진단 구성
 - 유형별, 기관별 리스트 작성과 분류
 -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략

02

지역 역량 결집 및 정치권 설득

- 입법권 및 금융당국 설득작업 진행
- 추진 활동 : 정치권을 대상
- 활동 방법 : 4대 충청권 지역시민사회,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 활동 수단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시민 토론회, SNS, 언론 등에 전방위적으로 홍보 진행

03

논리 및 수익모델 개발

- 서민 및 중소기업 특화상품 개발
- 그외 충청권 지역특화 금융상품 개발

36

V. 결론 및 시사점

결론

-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권/강원도/인천 등에서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여
- 충청권 지방은행은 설립시,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 특화 전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며 공공은행으로도 수익성 & 공공성 동시 달성 가능
- 그러나 빅테크·핀테크 금융의 도전 등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해결 과제 1

정책적 지원: 대 정부 요구 및 관철

1) 출자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

- 문제점: 현행법에서 국가와 예금보험공사는 출자자 제한이 없으나 지자체는 국가기관에 포함 안되며 지방공기업 영업제한
⇒ 요구사항: 지자체를 국가기관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 요구

2)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금고에 대한 관련법 개정

- 문제점: 현행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공개경쟁이 원칙
⇒ 요구사항: 행자부 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은행의 경우 지역금고로서 인센티브 제공

3) 대주주 구성요건 완화

- 문제점: 인터넷은행의 경우 34%까지 허용되어 있는 반면, 국가 10%, 지자체 15%로 제한
(예: 00증권의 경우 대주주 구성요건이 완화되면 투자의향 있음)
⇒ 요구사항: 지방은행 설립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지방은행 설립시 금산분리 완화)

37

V. 결론 및 시사점

해결 과제 2

은행 경영상 개선

4) 관계형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충청권 지방은행 지점에서 스코링 시스템 등 정량적 기법 외에 정성적 기법을 보완하는 관계형 심사평가 방안 마련
⇒ 독일의 저축은행 등에서 선진 기법 학습

5) 매니지먼트 강화

- 정성기법을 보완하는 대출 심사역 양성
⇒ 충청권 현장 중심형 은행 경영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

- 가칭『충청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도 비이자 수익 상품 외에 지역 ESG, 지역화폐 등 신상품 개발
⇒ 기존 저축은행의 성공적인 대출 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에 맞는 여수신 상품 모델 개발

7) 빅테크·핀테크 금융과 상생하는 사업모델 개발

-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기술을 관계금융에 접목시키는 방안이 필요
⇒ 핀테크가 대세이고 중요하지만 지역금융에서는 관계금융의 역할이 중요

38

감사합니다.

Thank you



「충청권의 미래를 묻다」
주최 : 중도일보/충남연구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최진석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자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2021. 12. 08.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CONTENTS

- I — 제4차 철도망 계획 소개
- II — 철도와 지역발전
- III — 광역철도망 구축 필요성
- IV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 V — 종합 및 제언



I.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소개



I.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요 및 내용

1. 국가철도망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5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2021~2030년
(10년)

공간적 범위

전 국

사업의 범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



계획의 주요 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6



I.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요 및 내용

2. 계획의 내용

2. 사업선정 기준

● 기 시행사업(57개)

- 기존 개별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

● 신규사업(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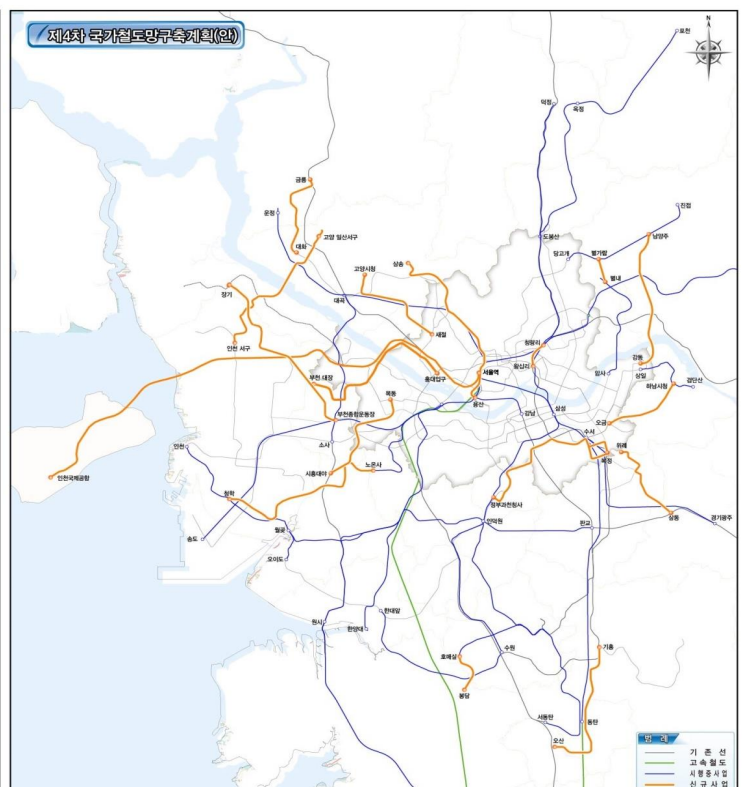
- 7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포함한 종합평가점수(AHP) 기준
+기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 (AHP 평가)수도권: 경제성, 정책효과 고려 / 비수도권: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고려


3. 비전 · 목표 · 추진방향



9

4. 제안사업 노선도





Ⅱ. 철도와 지역발전



Ⅱ. 철도와 지역발전

1. 철도개통의 영향

1. 철도개통의 영향

● 철도이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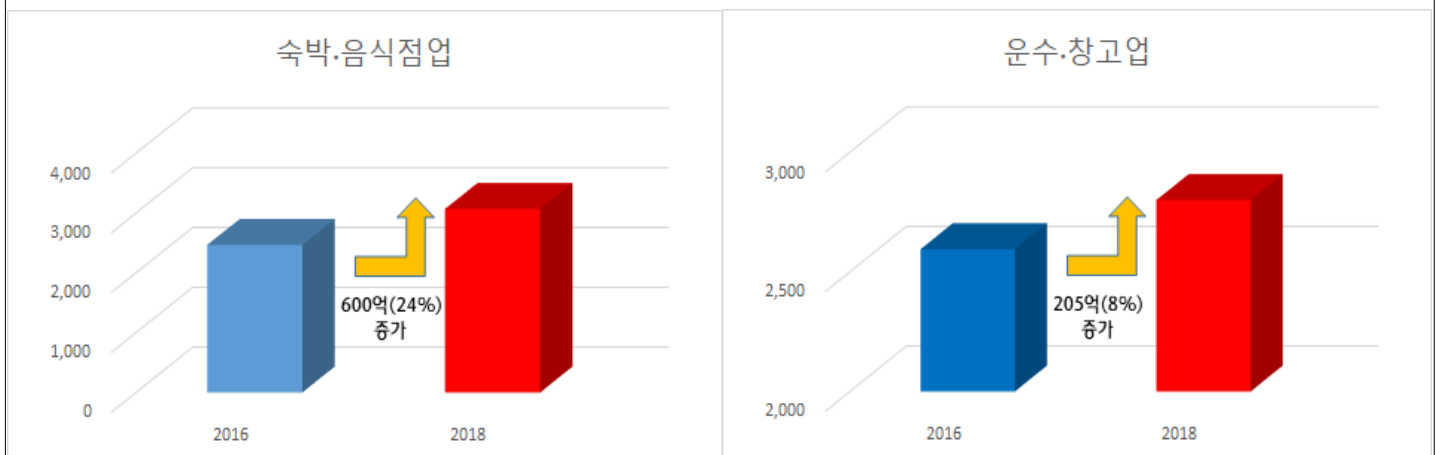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지역 간 및 광역철도의 총 이용객 수는 15.7억 명으로 2014년(13.8억 명) 대비 **약 14%(연평균 약 2.6%) 증가**



13

1. 철도개통의 영향

강릉선 KTX 개통의 영향



자료 : 강원통계정보, 지역내 총생산, http://stat.gwd.go.kr/sub/sub03_04.asp(21.3.31)

14

Ⅱ. 철도와 지역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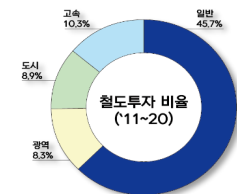
2. 비수도권 광역철도

2. 지역간 차별

주요국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연장

* 연장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합계, ()는 트램 연장

구분	수도권	동경권	런던권	파리권
인구(만명)	2,589	3,602	1,437	1,160
면적(km ²)	10,789	16,605	11,765	12,011
연장*(km)	1,513.50	2,650(417)	4,702	2,753(992)
면적당 연장(m/km ²)	140.3	159.6	399.7	229.2
인구당 연장(km/만 명)	0.58	0.74	3.27	2.37



지난 10년간 철도투자는
지역간 철도에 집중



수도권 광역철도 중
50%는 일반철도
노선을 공유



광역전철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집중(96.6%)

지방 4 : 13 수도권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 지속 예상

Ⅲ. 광역철도 구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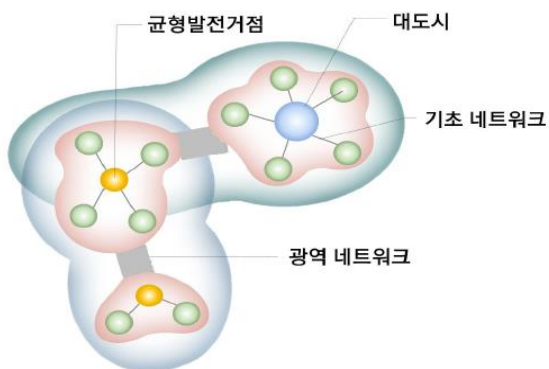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Ⅲ.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1. 경제 · 사회 여건 변화

지방광역권의
중요성 부각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광역권 조성 필요성 강조
-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거점 확보 필요 언급



프랑스 파리권 및 지방 광역권의 철도 연장 비교

(단위: 연장 km)

구분	1998	2003	2008	2013	2018
지하철, 급행철도, 트램	536	665	909	1,616	1,805
- 파리(Paris)권	339	338	356	871	922
- 지방 도시	198	327	553	745	883

- 지방 4대 광역권(부 · 울 · 경, 대구 · 경북, 광주 · 전남, 충청권) 모두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연대 · 협력 진행 중
- 우리와 같이 균형발전을 국토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최근 지방도시 (광역)철도 투자가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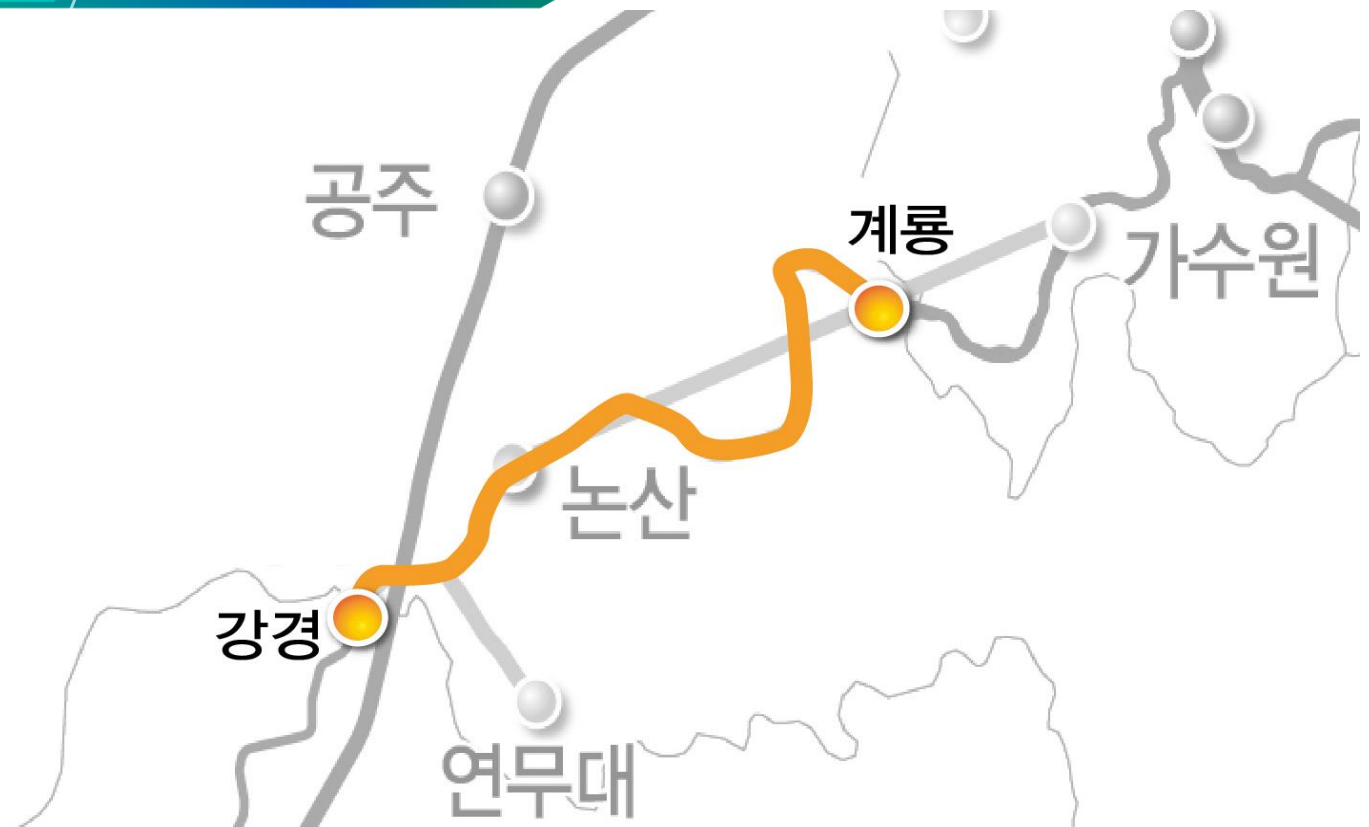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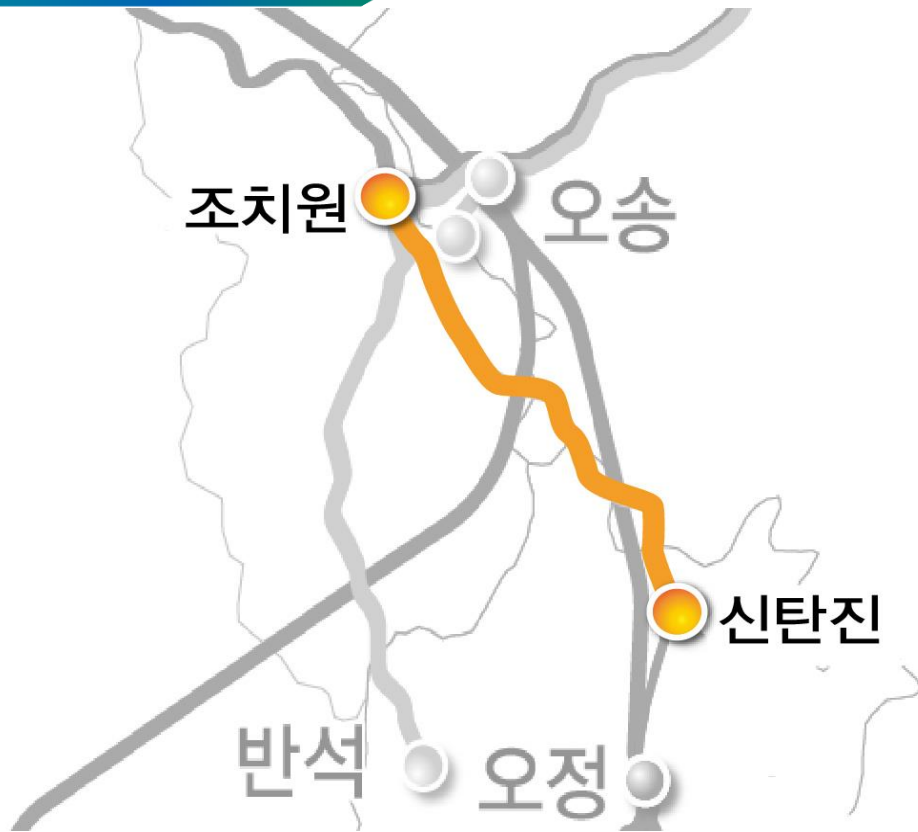


IV.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IV.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1. 제4차 국가철도망





IV.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2. 미래 노선

2. 미래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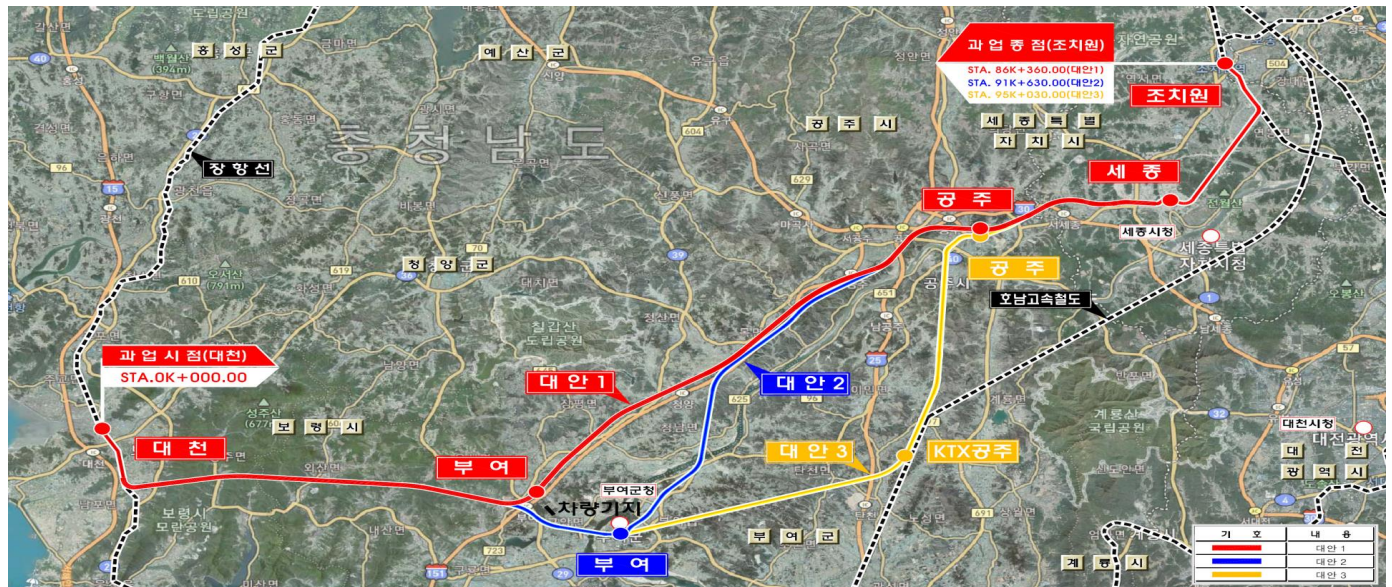
25

2. 미래 노선



26

2. 미래 노선



27

V. 종합 및 제언

1. 종합

- 철도의 지역발전 효과는 이미 확인되고 있음
 - 연계교통 및 역사 내외 판매업 등 상업활동 활성화
 - 유동인구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발전 효과는 질적 양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도심 역과 외곽 역이 다르고, 이용객이 많은 역과 많지 않은 역이 다름
 -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지역의 특성(잠재력)과 지자체의 역량이 핵심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당시 대구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
 - 역 주변 상권과의 갈등, 마찰, 이견은 개발을 막는 원인이므로 초기부터 관리 필요

2. 제언

- 타 지자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보완 시작
 - 경기도는 이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시작
 - 표면적 목표는 정부계획 보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후를 준비
- 핵심 쟁점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 개발 아이디어가 지역(도)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 광역철도가 이를 밑받침하는 방향의 그림을 그려야 함
- 충청권 광역철도의 지향점도 중요
 - 행정구역 개편 등 충청의 미래와 직결되어야...
 - 국제적 행사 등도 좋은 방점이 될 수 있음



감 사 합 니 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김흥주 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202.12.8.

김 흥 주 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1

- 발표 순서 -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III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2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1. 행정수도의 의미와 유형: 1) 의미

- ✓ 행정수도란?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수도의 여러 기능(정치·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중 **정치·행정이 중심**인 도시
- ✓ 등장배경: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성장거점 확보, 일체성 강화, 기존 수도의 과밀화 해소 등 다양함
- ✓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3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1. 행정수도의 의미와 유형: 1) 의미

-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 ✓ 수도를 그대로 둔 채 수도의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변경
-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국회, 청와대, 외교부 등은 서울에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 도시

4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1. 행정수도의 의미와 유형: 2) 유형

- ✓ 행정수도의 3가지 유형
- ✓ (1) 신행정수도 건설형(일극집중형)
- ✓ (2) 정부부처 분산이전형(다극분산형)
- ✓ (3) 공공기관 이전형(절충형)

5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1. 행정수도의 의미와 유형: 2) 유형

표 1 행정수도 유형

유형	내용	사례
신 행정수도 건설형 (일극집중형)	주요 수도기능의 일괄적 이전(청와대, 행정부처, 국회 등)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일본
정부부처 분산이전형 (다극분산형)	정부 부처의 여러 지역 분리 이전(정부 부처를 여로 도시로 분산배치,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독일, 말레이시아, 한국
공공기관 이전형 (절충형)	정부 부처 외 공공기관의 분산 이전(수도의 주요기능은 한곳에 집중, 특정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분산)	프랑스, 영국, 스웨덴

6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2.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1) 수도권 인구집중

- ✓ 1990년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42.7%, 2020년 50.1%/1970년대는 28.7%

표 2 수도권 인구집중도

(단위: 천명, %)

구분	1990	2000	2010	2020
전국	42,869	47,008	49,554	51,781
수도권	18,342	21,746	24,431	25,958
(서울)	10,473	10,078	10,089	9,602
(경기)	5,972	9,146	11,619	13,405
(인천)	1,897	2,522	2,723	2,951
수도권/전국	42.7	46.2	49.3	50.1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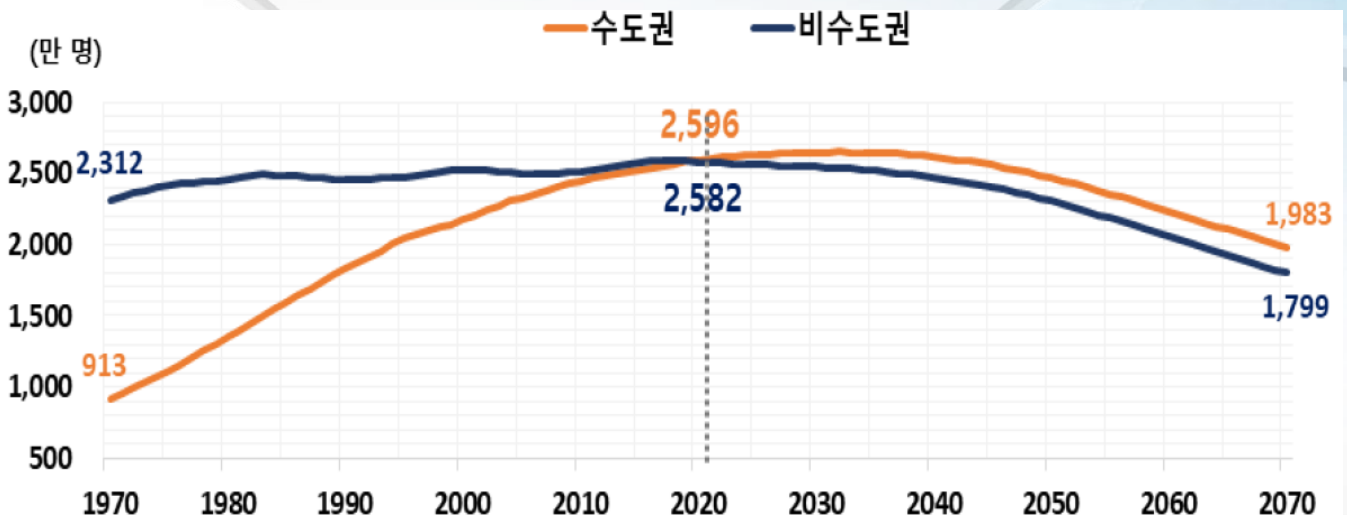
7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2.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1) 수도권 인구집중

- ✓ 2011-2015년 세종시와 혁신도시 입주로 정채/수도권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증가

그림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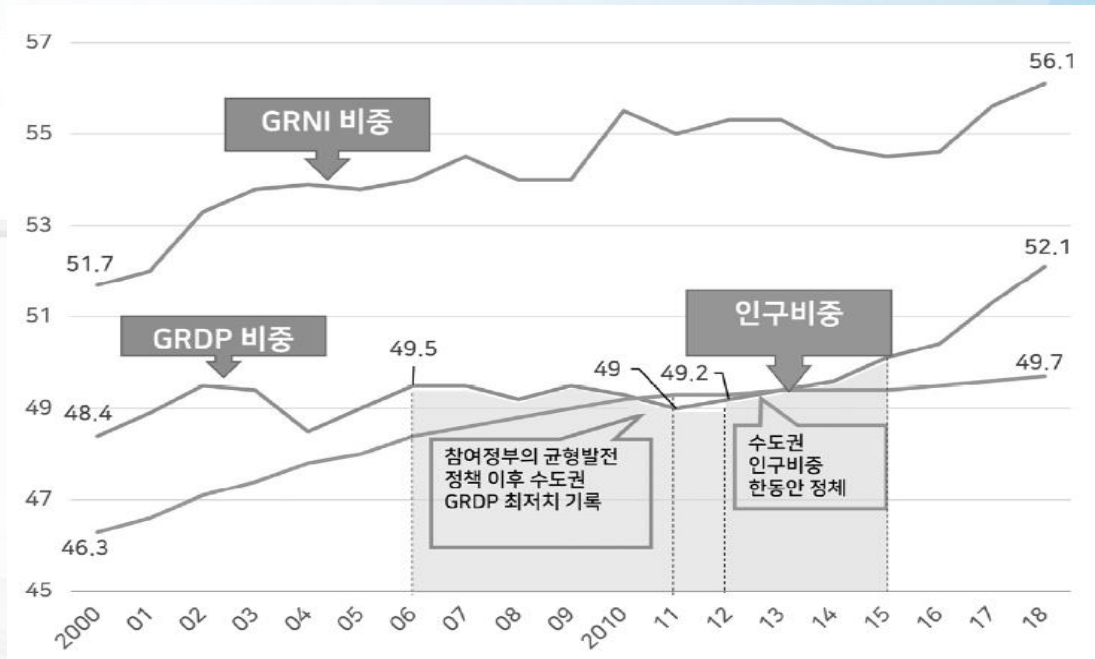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8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2.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2) 지역 간 발전 격차/경제불균형

그림 2 수도권 인구, GRDP, GRNI 비중



자료: 진종헌(2020)

9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2.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2) 지역 간 발전 격차/경제불균형

- ✓ GRDP, 종사자수, 예금, 대출, 전 산업 본사 수, 병원 수, 연구기관 수 등 역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음

표 3 2009년 대비 2020년 수도권 집중현상

구분	단위	전국 (A)	수도권 (B)	수도권 비중 (2018년, %)	수도권 비중 (2009년, %)
인구주택	면적	100,379	11,856	11.8	11.8
	가구 수	20,500	10,038	49.0	47.1
	주택 수	17,633	8,061	45.7	43.7
지역경제	지역총생산	1,900,007	984,630	51.8	48.6
	총사업체 수	4,103	1,935	47.2	46.8
	종사자 수	22,235	11,456	51.5	50.8
	예금	1,394,987	979,889	70.2	69.2
	대출	1,600,285	1,043,604	65.2	69.6
기타	전 산업 본사 수	52,687	30,499	57.9	59.2
	대학교 수	340	116	34.1	35.0
	대학생 수	2,721	1,073	39.4	40.9
	병원 수	66,316	34,449	51.9	51.4
	연구기관 수	51,769	33,382	64.5	61.5
	자동차 등록대 수	23,203	10,320	44.5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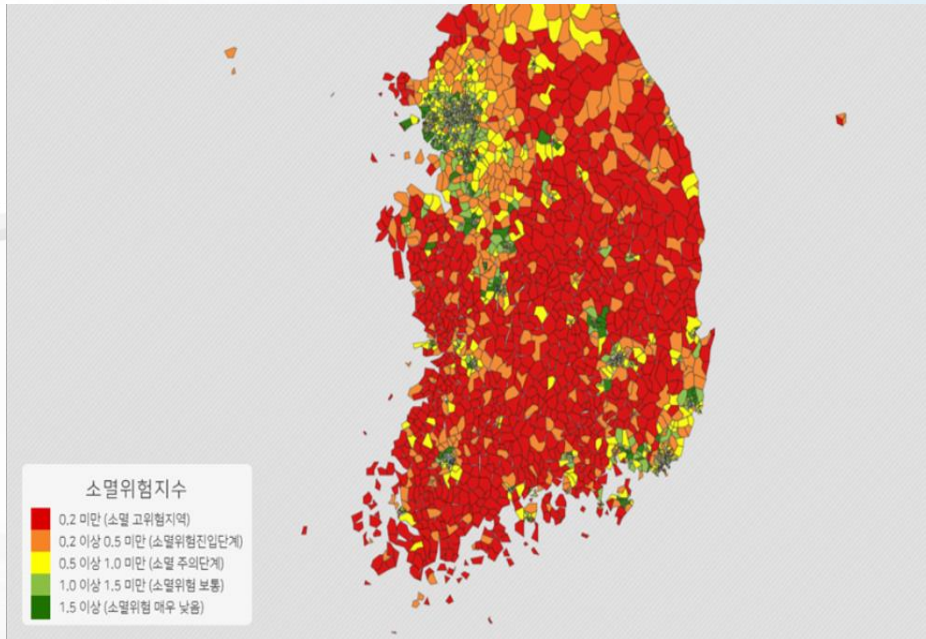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10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2.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3) 지방소멸의 대전제

그림 3 인구소멸위험 지수 현황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 소멸 위험이 매우 큼

자료: KBS

11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3. 행정수도 추진과정 및 정부부처 이전현황: 1) 행정수도 추진과정

표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행정수도 추진과정

시기별	설립과정 및 주요내용
2002. 09	•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노무현 대통령 후보)
2002. 12	• 노무현 대통령 당선(제16대 대통령)
2003. 12	• 국회 본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의결
2004. 04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시행
2004. 10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
2005. 05	•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2007. 12	• 이명박 대통령 당선(제17대 대통령)
2008. 04	• 한나라당 국회의원 과반의석 확보(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9. 09	•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발언(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2010. 01	•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공식 발표(정운찬 국무총리)
2010. 01	•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010. 06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
2010. 06	•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부결(국회본회의)
2010. 12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 통과)
2012. 07	•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충남 연기군 폐지/12. 6. 30)
2012. 12	• 정부세종청사 개청
2016. 06	• 국회법 개정안 발의(세종시에 국회의사당/본원 설치)
2019. 08	• 정부청사 5단계 이전 완료(중앙행정기관 22개, 소속기관 22개)
2020. 06	• 국회법 개정안 발의(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2020. 07	•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출범/김태년 의원 행정수도 추진제안
2021. 09	• 국회법 개정안 통과

자료: 김홍주(2019:65-66) 재구성

12

I.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

3. 행정수도 추진과정 및 정부부처 이전현황: 2) 중앙행정기관 이전 현황

표5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전현황

구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명
중앙행정기관(2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복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인사혁신처,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기관(22)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사무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민등록변경위원회외 18개 기관

13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1. 국정과제의 의미를 담은 세종시

-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구현** 선도도시로서 국정 방향이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음

“국정과제 77번에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대표 모델로 확립한
다는 방향과 함께, 아울러 중추적인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이전
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서 육성하고자 함”

14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1. 국정과제의 의미를 담은 세종시

- ✓ 1) 주요내용
- ✓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설치 및 필수적 인프라 조성
-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확대
- ✓ 2) 기대효과
-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모델 실현**
- ✓ 5대 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1. 국정과제의 의미를 담은 세종시

- ✓ 4대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 2.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제시됨
- ✓ 이중 전략 1번, 77번 실행과제에 해당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됨

16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1. 국정과제의 의미를 담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12. 27.] [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제정]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 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7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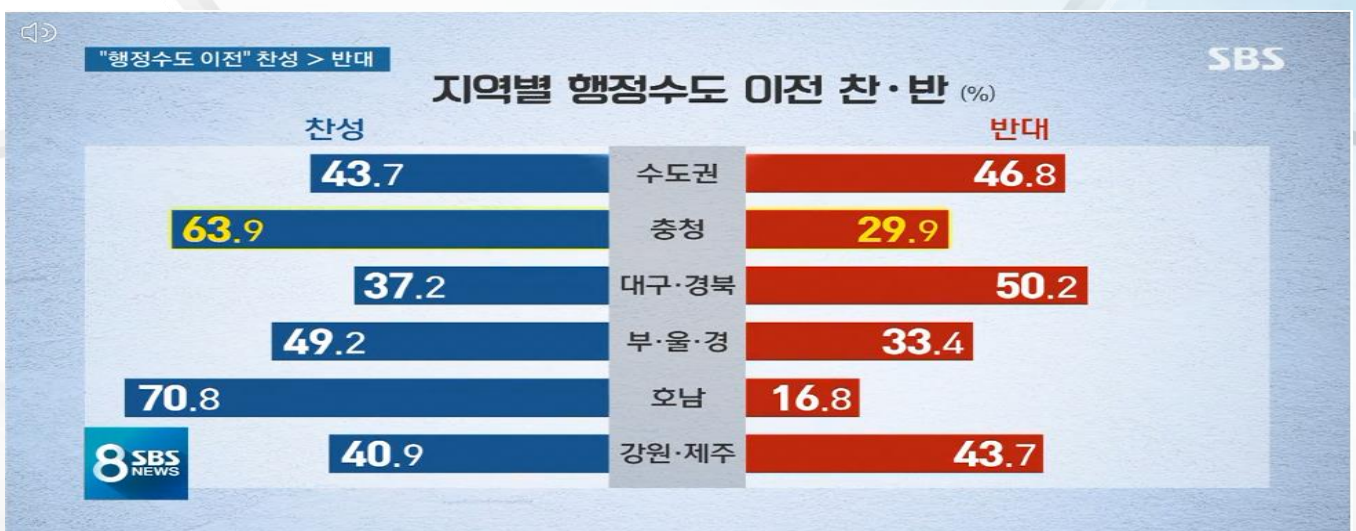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여론조사] 행정수도 이전, 찬성 48.6% vs 반대 40.2%['20년 7월 26일]

출처: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117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8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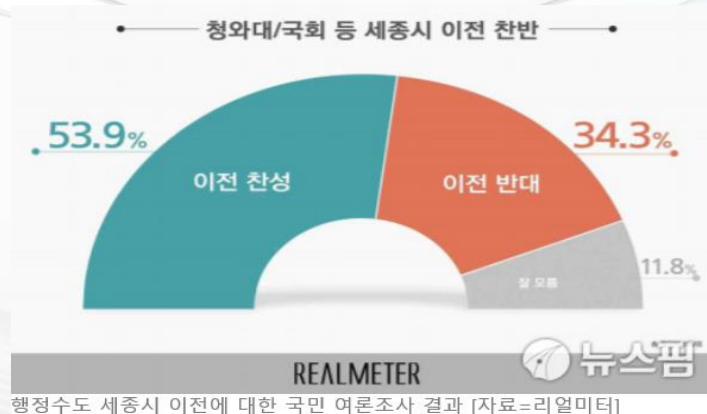
[여론조사] 세종 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vs 반대 34%/’20년 7월 22일

리얼미터,
지난 21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찬성 54.9%

호남·충청·2030세대 찬성 여론 높아…보수층·통합당 지지층 반대

출처: 리얼미터 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722000056>



19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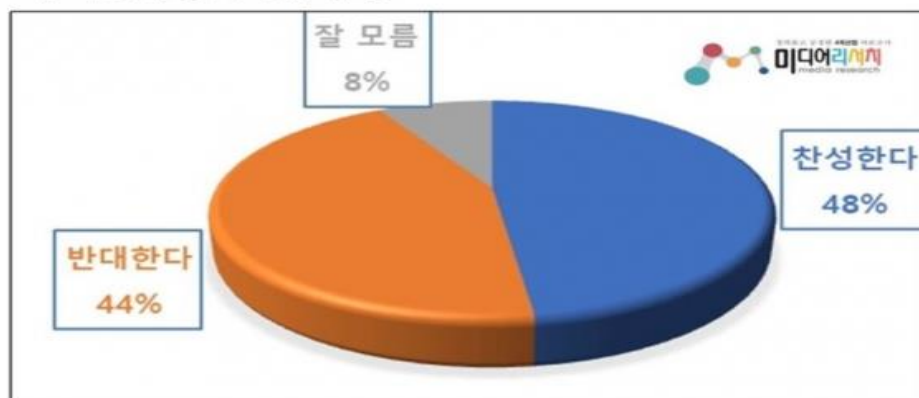
[여론조사] 세종 행정수도 이전, 찬성 48% vs 반대 44%/’20년 7월 27일

출처: 미디어리서치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73231>

◆ 행정수도 이전 ◆

Q1. 선생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판결을 다시 받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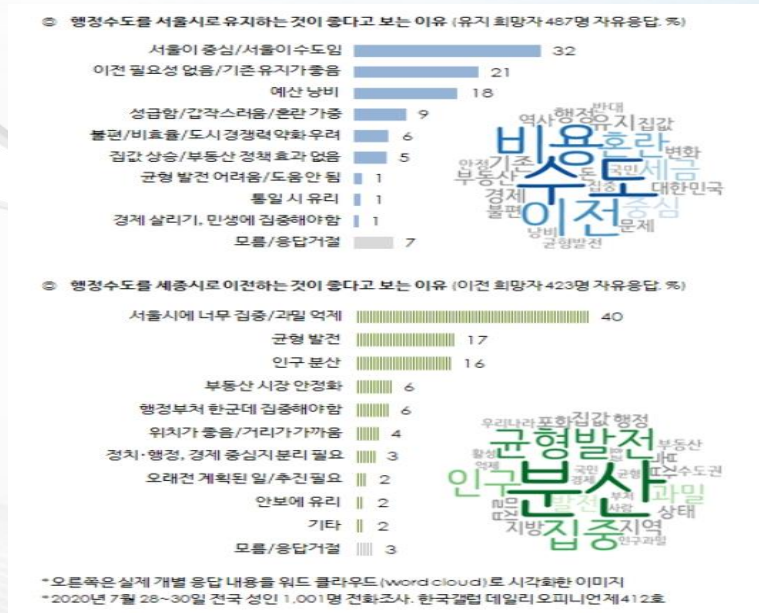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여론조사] 세종 행정수도 이전, 반대 49% vs 찬성 42%/’20년 7월 30일

출처: 한국갤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5976.html>



21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 2012년 세종시 출범 시 19만에서 2021년 현재 37만을 넘김
- ✓ 도시인프라 등이 상당히 확충되는 성과를 보임

표6 세종시의 인구 및 인프라 현황/2021년 8월

인구	10만 → 37만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 → 14개소
어린이집	106개소 → 348개소	방범CCTV	77개 → 2,141개
문화체육시설	415개소 → 105개소	상수도보급	71.5% → 96.8%
대중교통	41대 → 281대	도시공원	22개 → 91개

22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
- ✓ 세종시에 45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전, 16개의 국책기관 이전해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
- ✓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이전
-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여야 합의로 147억 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21년 2월 25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 및 국회소위 의원들 공감
- ✓ '21년 9월 2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23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기반조성>
- ✓ 행정수도완성+지방자치 선도도시로서 노력
- ✓ 특히,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5대 12개의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를 제도화함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설치, 참여연령 16세 확대
(마을입법)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 읍면동 조례규칙제개정 제안권 부여
(마을재정) 자치분권특별회계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마을계획) 시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마을경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이중 11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됨,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은 추진 중

24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인프라 확충>

- ✓ (문화교통인프라) 세계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레벨4(선도도시) 획득('20년 12월)
- ✓ 문화: 공연, 전시, 교육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확충/공연예술
연급공간, 시청자미디어센터, 박연문화관, 음악창
작소 등
- ✓ 교통: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공동
추진에 합의('20년 12월), ITX세종선, 대전-세종
광역철도의 구축을 위한 추진이 탄력받고 있음

27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인프라 확충>

- ✓ 교통: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1위('20년 11월
기준 60%, 15명→6명), 어린이 교통사고 54%감소
(‘20년 11월 기준 61건→28건), 승차거부 없는 카
카오 T블루 택시 운영('20년 12월), 어울링 이용
대폭 증가(58만→120만 건/'20년 12월 23일)

✓ <기타 성과>

- ✓ (중앙공원, 수목장 개장) 친환경 녹색도시 세종의
명품 여가 공간인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개장
- ✓ (기타) 싱싱장터 누적매출액 1천억원 달성, 지역화
폐 여민전발행,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예타통과('27
년 준공예정, 경제효과 20.6조원, 종사자수 1.9만명 예상)

28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2) 한계와 추진방향

- ✓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 및 교통 등 문제해결을 위해 균형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함
- ✓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필요한 상황/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상황
- ✓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건립 등 권역별 협력 추진 차원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VIP 주재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확산 전략보고

29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2) 한계와 추진방향

- ✓ 앞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 혁신도시 시즌2, 충청권 메가시티**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나가야 할 것임
- ✓ 무엇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현재 반쪽자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한계

30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2) 한계와 추진방향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5대 과제>

- ✓ (1)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 ✓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현재 국회법개정안 통과
- ✓ (3)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 (4)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및 설치
- ✓ (5)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설치

31

II.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2) 한계와 추진방향



출처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근거 마련'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257호), 2020.9, p.19.

32

Ⅱ. 행정수도를 통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2. 세종시의 성과와 한계: 2) 한계와 추진방향

-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국회법은 개정됨
- ✓ (1) 행정수도건설법 제정
- ✓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
- ✓ (3) 세종시법 개정
- ✓ (4) 정부조직법 개정
- ✓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련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33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1. 행정수도 지위확보

- ✓ 첫째,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협력을 위해 세종시에 전담부서 설치 및 중앙부처 인력 파견을 고려해야 할 것임
- ✓ 국무조정실 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업무(1명 / '21년 12월), 국회사무처 내 추진단 구성시 세종시 인력 파견검토('22년 상반기 중)
- ✓ 업무 추진체계의 일원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역할 필요/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재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충청권 민관정 협의 회 운영 등

34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1. 행정수도 지위확보

- ✓ **둘째, 헌법개정을 통한 완성.** 관습헌법을 이유로 신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 받은 이상, 수도를 구성하는 한 축인 입법부의 완전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현재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소극적 입장)
- ✓ 헌법에 ‘세종시=정치(행정수도)’로의 규정이 필요함. 그리고 정치행정수도로서 지위가 부여되 도 그 구성과 운영은 법률에 위임해 구체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관련 핵심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등에서 정치행정수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임

35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2. 대통령 집무실 설치

- ✓ 중앙행정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이전한 상황
- ✓ 국가원수로서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임
- ✓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일 것임
- ✓ 대통령 집무실에 세종시에 설치된다면, 대통령은 최소 일주일에 2-3일은 세종시에 머물고, 머무는 동안 대통령 주재 정례국무회의,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36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3.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한 법개정 필요
- ✓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으며 세종시에 소재한 기관과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 행복도시법 개정(강준현 의원 발의, '20년 7월 국회계류 중) 필요. 이전 제외 대상에서 여성가족부 제외,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세종시 설치로 명문화 하는 방안

37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3.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 **(단기)** 여가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업무성격상 이전이 필요한 대통령 자문위원회(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등)는 조속히 이전이 필요
- ✓ **(중기)**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신설시, 세종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
- ✓ **(장기)** 헌법 개정을 전제로 국정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과 집적이 필요할 것임/행정비효율성 문제 해소,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38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4.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가치 향상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 공공기관의 수 역시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함

39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4.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 ✓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6만 5,000건에 비해 33만 3,000건이 많음
- ✓ 또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증가
-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의 설치**를 통해 그 기능과 위상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40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5. 국회 타운을 위한 계획 구체화

- ✓ **(기본구상)**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상징, 민주주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야 할 것임
- ✓ 주거 및 생활 편의 기능, 유관기관 등이 한 곳에 어우러진 국회 타운의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함
- ✓ **(주요기능)** 국회본관,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기능인 부분에 더해 국회의원, 사무처직원, 보좌관, 방문객 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필요
- ✓ 주거, 숙박시설, 다양한 편의시설, 언론, 시민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이 입주할 공간, 회의 시설 등

41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5. 국회 타운을 위한 계획 구체화

- ✓ **(추진계획)** 행복청과 협의해 국회타운의 주요기능들이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 또한 정치권, 국회사무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고, 설계비 예산(147억 원)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42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6.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법률적 지위 확보

✓ 세종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려는 것은 정부기관이전 등의 단순한 분산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은 분산정책에 기초, **지방분권이라는 효과**를 제고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

43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6.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법률적 지위 확보

✓ 결국, 세종시의 자치분권을 고도화 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함

✓ 즉, 세종시에 고도의 자치권부여(헌법적 보장 병행),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중앙정부), 세종시(지방정부)가 연계성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설정 필요. 특히,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특별자치시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44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7. 메가시티와 연계한 전략방안 마련

- ✓ **(메가시티 진행상황)**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
- ✓ 메가시티의 개념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해, 2021년 연내 완료 예정
- ✓ **(메가시티의 방향)**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권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교통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45

Ⅲ.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7. 메가시티와 연계한 전략방안 마련

- ✓ 산업은 경쟁이 아닌 특화와 협업으로 발전, 도로, 철도, 광역 급행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 ✓ 4개 시도의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 및 강화시켜 광역생활경제권의 통합, 통합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통합을 통한 시너지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 ✓ 전략과제 도출과 방향성 정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 긴 호흡으로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46

7. 메가시티와 연계한 전략방안 마련

- ✓ **(행정수도와 연계)** 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은 당연히 충청권 전체로 확산될 것임
- ✓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등이 하나의 경제권,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 협력분야를 넓히고 협력체계를 공고이 해서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